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구상

2009年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防政策專攻

朴 章 雨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趙永甲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구상

Embodiment of Unified Korea's Military Strategy
Following the Transformation of Surrounding National
Security Circumstances

2009年 6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防政策專攻

朴 章 雨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趙永甲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구상

Embodiment of Unified Korea's Military Strategy
Following the Transformation of Surrounding National
Security Circumstances

위 論文을 國際安保戰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6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防政策專攻

朴 章 雨

朴章雨의 國際安保戰略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9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7
제 1 절 군사전략의 개념과 구성요소	7
제 2 절 한국군의 군사전략 변천과정	12
제 3 절 연구 분석의 틀	15
제 3 장 주변 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17
제 1 절 세계 안보정세	17
제 2 절 주변 4대 강국의 안보정세와 영향요인	19
제 3 절 미래 4대 강국의 안보구도 전망	28
제 4 장 미래전의 양상 및 한국의 군사전략	45
제 1 절 장차 예상되는 미래전의 양상	46
제 2 절 한국의 군사전략	63
제 3 절 한국과 주변국의 군사전략 분석결과	67
제 5 장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구상	69
제 1 절 군사전략 목표	69
제 2 절 군사전략 개념	72
제 3 절 군사력 건설방향	76

제 6 장 결 론	90
-----------------	----

참 고 문 헌	94
---------------	----

영 문 초 록	97
---------------	----

< 표 목 차 >

<표 1> 한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변천과정	14
<표 2> 2030년 세계패권 능력 추정	38
<표 3>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45
<표 4>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46
<표 5> 남·북한 통일이후 통일한국군 군사전략(종합)	89

< 그림 목 차 >

<그림 1>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8
<그림 2> 분석의 틀	16
<그림 3> 미국의 국방 상부체계	77
<그림 4> 미국의 지휘체계	78
<그림 5> 통일한국군의 지휘구조 발전(안)	8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일한국¹⁾의 군사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관계가 결정적인 요소임을 논하는 것이다. 안보환경에 있어서 각각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 사회, 군사 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정치, 외교 면에서 순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의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²⁾ 따라서 국가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자유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전쟁을 억제 및 예방하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에 대한 연구와 이해이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전쟁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국가안보의 목표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군사조직을 정비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등의 군사력 건설과, 이러한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운명은 통일한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쟁 강대국 간에 형성되는 세력균형의 기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³⁾ 현재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강 관계는 당장 폭발할 위험한 문제는 없으나, 중국의 초 강대국화를 경계하는 소위 중국 경계론과 일본의 유사법제(Military emergency legislation)⁴⁾의 국회법안 통과로 인해 한반도 주변국 관계가 순탄하지 않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된 불안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유동적 상태에 놓여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

1) 지금부터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오늘날 대치기 상황에서 1단계의 신뢰구축, 2단계의 국가연합, 3단계의 군사통합으로 진행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경에 통일을 성취하고, 2030년경 통일안정기를 달성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2) 국방부(2003),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 서울 : 국방부, pp. 84-85.

3) 조명(1996), 『한국의 운명』, 서울 : 교학사, p.25.

4) 박원재(2003), “자위대 폐지 국방군신설”. 『동아일보』, 2003. 2. 16.

며, 일본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균형자의 역할을 이어받아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과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며 러시아와의 동반자적 역할을 추구하고 경찰국가를 과시하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안보환경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이후에 미국과 통일한국이 동맹관계를 지속하였을 때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한반도를 관망할 것이고, 러시아는 군사 및 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한반도에 대한 실리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화해·협력기, 공존기, 통일이, 안정기의 군사전략은 미국과 일본의 세력 확대를 견제할 능력이 있고,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전략을 고려대상으로 선정해야한다.

현재 한반도 주변 4강 중에서 중국과 일본 등의 세력부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제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 제2차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2009년 4월)등 대결적인 군사시위를 계속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난과 김정일 체제의 불안함 등을 고려한다면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 직면하게 될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통일 환경에 적합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수립에 따른 적정수준의 군사력 건설 등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다. 남북대치기의 군사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냉전구조 안보상황 하에서 수립되어 안보상황에 맞추어 발전되어 왔으며,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통일을 달성하여 주변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는 군사전략개념의 새로운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은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준비되고 장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과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여 보고, 이에 따

른 한반도의 화해·협력기, 공존기, 통일기, 안정기의 군사력 건설 및 운용에 지침이 될 군사전략 방향을 제시하여 통일한국이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선택해야할 군사전략을 구상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한반도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통일 한국의 군사전략을 정향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에 관련된 이론적 분석의 틀은 무엇인가? 둘째, 통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의 안보환경을 살펴보고 주변국과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셋째, 한국의 군사전략을 바탕으로 한 통일 한국의 군사전략을 어떻게 구상해야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통일 후 주변국과의 협력 또는 대치 국면에서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통일 한국의 군사전략 유형을 제시하고자한다.

미래의 동북아 질서는 협력과 대립, 갈등이 병존하는 형태가 지속될 것이다. 즉, 미·일간 긴밀한 동맹구조의 축과 중·러 간 동반적 협력관계 축의 존재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양대 축은 때때로 협력하고 때로는 상호분쟁과 갈등상태를 겪으면서 미래 지역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지역질서 주도자로서 미국은 자신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할 것이며, 새로운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본이 지역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지속될 것이며, 통일 한국 이후에도 미국은 통일 한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다.⁵⁾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상호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1997년 중·러 국가간 국경병력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8년 이후부터는 미·일과 NATO에 대응하기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미·일의 TMD 구축계획에 대한 반대,

5) 국방정보본부(2003), 『2002 세계군사동향』, 서울 : 국방정보본부, p.88.

코소보 사태, 주 유고 중국대사관 피폭 등에 따른 전략적 이해의 일치는 이러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도입⁶⁾하는 등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러시아가 경제문제를 회복하고 중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변국의 변화에 따른 군사전략은 통일이전부터 충분히 검증되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통일 이후 지속적인 연장선에서 추진해야할 당면과제인 것이다.

통일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법을 사용하였다. 통일시기와 방법은 학자들과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시기는 2025년 이후로 가정하고, (만약 단일국가로 안 되면 일종의 남·북 연합 형태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활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핵 인프라와 역량의 최종 처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그러나 재건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신생 통일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승인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아마도 1991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다. 만일 느슨한 연합 형태의 한국이라면 비핵화를 추진하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지도 모른다. 한국의 통일로 다른 전략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비핵화, 비무장화, 난민이동, 재건 비용 부담 같은 새롭게 지속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주요 강대국들이 새로운 수준의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⁷⁾, 통일방식은 한국주도의 점진적 통일방식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는 비핵화, 비무장화, 난민이동, 재건비용 부담 같은 새롭게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또한 만일 단일국가로 안 되면 일종의 남북 연합 형태로라도 통일이 가능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변수가 많고 ‘제2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정권교치 준비’ 등 다양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나 미 국가

6) 국방정보본부(2003),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보고서", 『2002 세계군사동향』, 서울 : 국방정보본부, p.184.

7) 미국 국가정보위원회(2009), 『글로벌 트렌드 2025』, 서울: 한울, pp.136-137.

정보위원회의 판단인 한반도의 통일시기를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면서 일정기간의 내부 수습기를 거쳐 경직된 체제가 개방된 체제로, 통일방식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며, 통일과정에서 정경분리원칙의 적용으로 경제통합을 이루질 것이고, 사회적·문화적 통합이 이루어 질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국가통합 역량을 극대화하여 정치적·군사적 통합을 이룩하고, 통일 주도 국가는 군비통제정책과 군사통합연구의 사전준비완료가 되어 가장 현실적이고 통일과정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점진적 통일방식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⁸⁾ 또한 국제사회는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향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계전사를 통하여 군사전략 변천과정과 주요국가와 이론가의 군사전략, 그리고 안보환경 유사 국가의 군사전략을 이해하고, 자국 고유의 군사전략을 연구하여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범위를 한정하여 군사전략의 기초 이론만을 언급 한다.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민족정신, 군사적 전통, 지정학적 요인, 이념과 사회체제, 적의 위협과 군사사상, 대외적 관계, 과학기술과 미래전의 양상 등 요인별로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전략, 과학 및 군사기술, 미래전 및 전략 환경의 변화와 정치·경제·군사 등의 요인으로 한정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범위,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군사전략 구상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틀로서 전략의 개념과 구성 등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군사전략 논리를 고찰하는 군사전략 개발을 위한 분석의 틀과 대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주변안보환경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의 한반도군사전략은 비밀문서임을 고려하여 핵심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략적인 수준에서 군사목표, 군사전략 개념, 군사자원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통일한국이 선택하게 될 한국과 주변 4대 강국의 안보환경과

8) 조영갑(2006), 『국가안보학』, 서울 : 선학사, pp.551-552.

군사전략을 바탕으로 한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제 1 절 군사전략의 개념과 구성요소

1. 군사전략의 정의

군사전략(軍事戰略, Military Strategy)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軍事力, Military Power)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술(術)과 과학(科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즉,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여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며, 강구된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는 것과 준비된 수단을 운용하여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군사전략의 의미이다.

정의에서 술과 과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먼저 과학은 관찰과 연구실험을 통해 입증된 원리, 원칙, 방법, 기술, 절차, 각종 제원 등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말하며, 술은 과학인 원리, 원칙, 기술 및 절차를 당면한 상황에 적용하는 인간의 직관과 통찰력을 말한다.

따라서 군사전략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군사전략개념을 수립하며 군사자원을 건설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술과 과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¹⁰⁾

2.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군사전략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략이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략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한 사람으로 미국의 육군참모총장을 역임(1955~1959년)한 테일러(Maxwel D. Taylor)장군을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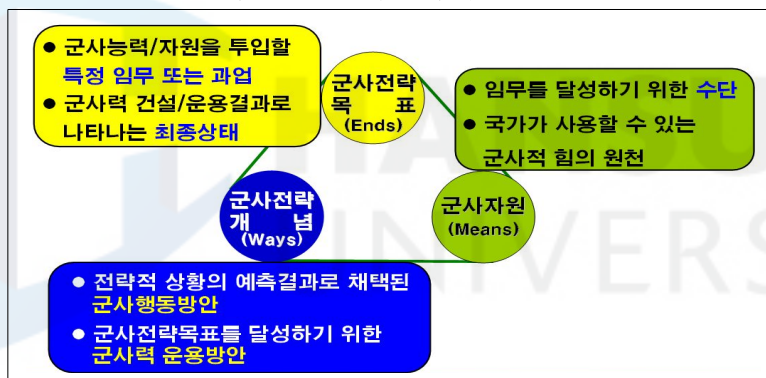
9) 조영갑(2006), 전계서, p.218.

10) 국방대학원(1984), 『군사전략(Ⅰ)』, 서울 : 국대원, pp.83-84.

수 있다¹¹⁾. 그는 전략을 설명하면서 “전략은 최종상태로 표현되는 목표와 행동방안을 의미하는 방법, 그리고 목표달성의 도구인 수단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략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 방법, 수단이라는 개체화된 각각의 요소가 하나로 연계되었을 때 그 전체를 전략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개념을 기초로 하면, 군사전략은 군사능력 및 자원을 투입해야 할 특정임무, 과업의 의미인 군사전략목표(Ends)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행동방안의 의미인 군사전략개념(Ways)¹²⁾, 군사전략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말하는 군사자원(Means)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은데, 이러한 각각의 구성요소가 균형을 이루어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군사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출처 : 장용(2005), 『군사전략 이론 및 적용』, 대전 : CODI출판부, pp.21.

11) 최병갑 외(1988), 『현대군사전략 대강(Ⅰ)』, 서울 : 을지서적, pp.353-361.

12) ‘Ways’를 전략의 구성요소에서는 ‘방법’으로 군사전략의 구성요소에서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전략의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전략’이 군사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방법 모두가 적용가능)으로 제시되었으나, 군사분야에서는 용병술체계상 작전술과 전술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므로 그 상위체계인 군사전략에서는 이를 지도해 줄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개념’이라고 제시되었다.

앞서 제시한 군사전략의 정의도 바로 이와 같은 군사전략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가지는 상관관계를 연계시킴으로서 군사전략을 표현하고 있다. 즉, 군사전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군사전략목표, ‘군사력’이라는 군사자원, 이 군사자원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건설하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라는 군사전략개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 군사전략목표(Ends)

군사전략목표는 군사능력과 군사자원을 투입하여 달성해야 할 특정임무 및 과업이며, 국가 전략적 수준에서 도출한 모든 군사 분야의 과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된 최종상태이다.¹³⁾ 여기에서 최종상태란 군사작전이 종결된 이후에 국가 및 군사전략적 수준에서 판단하여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즉, 국가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정세가 군사적으로 조성된 상태이다. 이러한 최종상태인 군사전략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이 감소되거나 제거된 상태여야 한다.

2) 군사전략개념(Ways)

군사전략개념은 설정된 군사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행동방안으로서 전략환경평가 결과 도출된 현재 및 미래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개념이다. 이 군사전략개념은 미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군사력 건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당면한 위협에 대해서는 군사력 운용을 위한 지침이 된다.

3) 군사자원(Means)

군사자원은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전략개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군사자원은 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자원을 일컫는 것으로서 인력, 물자, 예산, 부대 등 모두를 말하며¹⁴⁾, 현재

13) 합동참모본부(2001), 『군사기본교리』, 서울 : 합참, p.48.

14) 이종학(1987), 『군사전략론』. 서울: 박영사, p.103.

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가 지니는 잠재력까지도 포함한다. 필요시에는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동맹국의 가용한 자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

3. 군사전략의 유형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의 지침 하에 평시에는 전쟁을 대비하고 억제하며, 유사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체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¹⁵⁾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적용 시 군사전략의 유형은 크게 평시 전쟁억제를 위한 억제전략과 억제실패 시(즉, 전시)국가를 방위하는 방위전략, 그리고 전·평시의 기타전략으로 구분한다.¹⁶⁾

1) 억제전략

억제전략(抑制戰略)은 ‘어떤 국가가 침략을 할 경우에 그 침략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상의 견디기 힘든 손해를 받게 될 것임을 그 나라에 인식시켜서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이 발발 시에는 그 전쟁의 규모 및 치열도가 확대될 위험성을 인식시켜 전쟁을 억제토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¹⁷⁾으로써 이러한 억제전략은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전쟁억제의 방법은 ‘응징을 통한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 즉 ‘제재적 억제전략’이다. 이는 도발국가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욱 큰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 적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제재적 억제전략은 핵(効)억제전략이다.

둘째,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전쟁억제의 방법은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이다. 이것

15) 박휘락(2005), 『전쟁, 전략, 군사입문』, p.117.

16) 육군대학(2008), 『군사전략』, pp.16-20.

17) 조영갑(2006), 전계서, p.222.

은 철저한 방어태세를 구비함으로써 적에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각종 방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것과 같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이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모든 비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할 능력이 있음을 적에게 인식시켜 적이 침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총합적 억제전략’이다. 예를 들면 도발 의사가 있는 국가에게 경제적 원조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도발의사를 자제시킨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군사력 이외의 다양한 국력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융통성이 크다. 다만, 국가의 자존심이 손상 받을 수 있고, 비도덕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유화정책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 국민들에게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방법은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이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방위전략

방위전략(防衛戰略)은 ‘적대 국가에 대해서 전쟁억제가 실패하여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군사전략’¹⁸⁾으로써 전략태세, 방위선, 전쟁기간, 그리고 작전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첫째, 전략태세에 따라 구분하면 군사력 건설 및 운용에 있어 주 기능이 방어에 있는 ‘수세전략’과, 주 기능이 공격에 있는 ‘공세전략’, 그리고 공세적 작전으로 전략목표를 추구함을 기초로 하되 상대방의 공격을 전제로 일단 전략적 수세를 취하다가 즉시 공세로 이전하는 ‘수세후 공세전략’의 유형이 있다.

둘째, 결전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면 국경선 전방에서 결전을 하고자 하는 ‘전진방위전략’과 국경선 지역에서 적을 격멸하는 ‘국경선 방위전략’, 그리고 적을 국토내부로 끌어 들어서 격멸하는 ‘역내방위전략’의 유형이 있다.

셋째, 전쟁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전투력 집중과 신속한 기동을 통해 적의

18) 조영갑(2006), 전계서, p.226.

핵심 전쟁수행 역량을 무력화시켜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속전속결전략’과 국가의 제 수단을 활용하여 장기전을 통해 적의 저항의지와 능력을 제거하여 전쟁목적을 달성하려는 ‘지구전 전략’이 있다.

넷째, 최종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동시에 할 것인가에 따라 미국의 와일리(J. S. Wylie)제독이 주장한 ‘연속전략(Sequential Strategy)’과 ‘누적전략(Cumulative Strategy)’, 그리고 존. 와든(John A. Warden)이 주장한 ‘병행전 전략(Parallel War Strategy)’으로 구분한다.

3) 기타전략

평시 억제전략, 전시 방위전략 이외에 전·평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접근방법에 따라 간접전략과 직접전략, 대응방법에 따라 대칭전략과 비대칭전략, 대상기간에 따라 장기 및 단기 군사전략 등이 있다.

이제까지 제시된 군사전략은 현재까지 발전되어 적용되고 있는 전략의 유형에 불과하며,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발전되거나,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전략이 창조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한국군의 군사전략 변천과정

창군 이래 한국군의 군사전략 변천과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무기체계 발전과 함께 변천과정을 구분하면 크게 ‘창군 및 국방체제 정비기’, 자주 국방기, 한국방위의 한국화’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¹⁹⁾.

1. 창군 및 국방체제 정비기

창군 및 국방체제 정비기는 창군부터 1차 울곡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73년까지이다. 분단과 함께 한국군은 미국과 일본의 잔존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의 군사원조와 지도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때의 군사전략은 국가건설에

19) 김문수(2001), 『한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 : 국방대학원, pp.73-77.

참여하고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6.25전쟁 후 한국군은 또다시 미국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 하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동맹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억제 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무기체계를 무상으로 원조 받고, 군조직과 작전교리가 미군의 그것을 모범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1968년 1.21사태와 닉슨독트린 발표, 1971년 미7사단의 철수 등으로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이 태동하게 되었다.

2. 자주국방기

자주 국방기는 1차 율곡사업이 개시된 1974년부터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다시 1970년대의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와 1980년대의 자주국방 정립기로 나눌 수 있다. 한국군의 자주국방 노력은 주로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집중되어 전력증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77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 연합방위가 전략개념으로서 확고히 정착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에 있었던 카터의 철군 발표로 자주적 군사능력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어 기존의 율곡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이는 1982년 2차 율곡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대북 질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략 및 작전개념도 연합방위를 기반으로 한 보복적 억제와 공세적 방어를 채택하였다.

3. 한국방위의 한국화기

한국방위의 한국화기는 1990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변화가 일어나 1991년 제2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점차 지원적인 역할로 전환해 간다는 원칙”이 천명된 것을 계기로 소위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생겨났다. 한국군의 군사전략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 승리를 달성하며 분쟁 시에 적절한 대응으로 국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

립되었고, 전력면에서 정보시대에 대비한 자주적 억제능력을 상당 수준으로 구비하였으며,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변천과정

시대구분		군사전략		무기체계
		전략목표	전략개념	
창군기 / 국방체제 정비기	창군기	- 공산주의 위협 대응 - 남북통일	공동방위	- 미·일 잔존무기 - 자체방어수준
	50~60 년대	북한군 격퇴	- 연합방위 - 단계적 선방어	2차대전당시 무기체계 - 취약점 보강위주 전력 증강
	60~70 년대	- 북한군 격퇴 - 간접도발 격퇴	- 연합방위 - 고수방어	전력지수 약 50%수준
자주 국방기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		- 연합방위 - 평시 : 거부적 억제 - 전시 : 적 주력 격멸 - 도발 : 응징보복	- 지·해·공군 장비 증강 ※ 군사력 구조적 체계화
	자주국방 정립기	- 평시 : 억제 - 전시 : 국토방위 (북한군 격퇴) - 도발시 : 적절한 대응	- 연합방위 - 평시 : 보복적 억제 - 전시 : 적주력 격멸 - 도발 : 응징보복	- 전력증강 가속화 - 육 : 최신대전차 무기 - 해군 : 소형함, 유도무기 - 공군 : 질적 우위 달성 ※ 독자방어 기반조성
한국방위의 한국화 (1990~현재)		- 평시 : 억제 - 전시 : 국토방위 (북한군 격퇴) - 도발시 : 적절한대응	- 연합방위 - 평시 : 보복적 억제 - 전시 : 즉각반격 (공세적 유인타격) - 도발 : 선별적 보복	- 육군 : 기동, 화력 보강 - 해군 : 잠수함배치 - 공군 : 최신전투기 배치 - C4I체계 발전

출처 : 김문수(2001), 『한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 pp.73-77 재구성

제 3 절 연구 분석의 틀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남·북한 통일 이후의 국가안보 위협상황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을 미리 구상하여,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남·북한 통일 시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군사전략 수립은 육군대학에서 적용중인 군사전략기획과정 7단계를 적용하되 상위목표 인식과 전략적 요구사항 도출, 가정 설정은 크게 중요시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생략하고, 이외의 과정인 전략 환경 평가, 군사전략목표 및 개념 수립, 그리고 군사자원을 판단은 핵심요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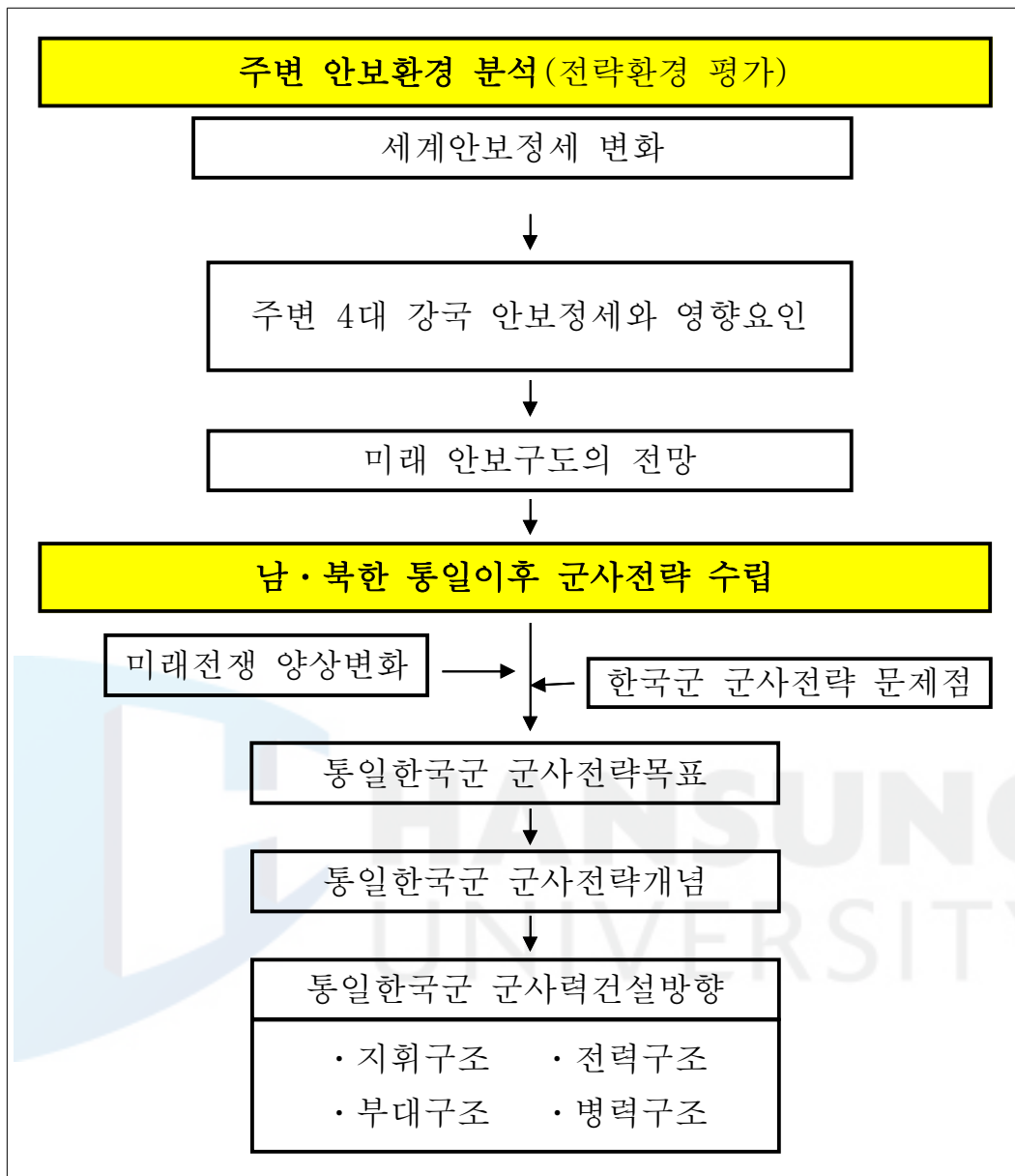
먼저, 안보환경 분석(또는 전략환경평가)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살펴보고, 주변국가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건설추세 고찰을 통해서 통일한국군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를 가정하여 상대국과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경우 주변국가와는 어떠한 군사적 충돌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여 이에 대비하는 군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군사전략 수립은 안보환경 분석을 기초로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전략목표 설정, 군사전략개념 수립, 군사자원을 판단하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 이후의 군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차전 양상의 변화를 예측하여 이를 적용하고, 한국 군사전략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은 앞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개념을 수립하며, 군사전략개념이 실현가능하도록 군사력 건설방향을 군 구조 측면에서 제시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그림 2>는 남·북한 통일이후의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석의 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분석의 틀



제 3 장 주변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제 1 절 세계 안보정세

1. 안보위협 변화

오늘날 안보위협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양상이 살상무기(WMD) 확산·사이버공격 등 초국가적 위협이 보편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다. 전염성 질병·자연재해·지구온난화·환경오염 등 비군사적 위협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안보역량을 강화 하는 동시에 국가 간 전략적인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테러조직과 같은 비국가주체들의 활동은 세계 안보환경의 주요한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보유할 수 없었던 공격수단과 파괴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규군과는 달리 다양한 국적의 조직원들로 구성된 분산형 네트워크 조직인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대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탈냉전 이후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감소되었으나 세계 도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지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영토·자원 분쟁, 종교·인종 갈등, 분리·독립 운동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중동에서는 2003년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 발발한 이스라엘-레바논간 전쟁은 종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유럽에서는 2008년 2월,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 등 EU 주요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승인한 것과 달리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상당

20) 국방부(2008).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pp.8~12.

수 국가들은 이의 승인을 미루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수단, 소말리아, 차드 등지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대국들이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은 물론 중앙아시아·남미·아프리카·카스피해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각축을 벌이고 있어 해당지역 정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자원 보유국들은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및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전염성 질병(신종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규모 자연재해(중국 쓰촨성 지진, 미얀마의 사이클론 등)등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상되고 있다.

2.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

국제사회의 안보위협 양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 대응방법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단일국가만의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동맹국·우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존 군사력 위주의 대응으로부터 외교·사법·정보·경제 등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9·11테러를 자행한 단체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테러 집단인 ‘알 카에다’로 밝혀지면서, 테러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문제는 전 세계적 차원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가 간의 정보교환, 자금동결, 수사협조, 테러분자 색출 및 인도 등에 관한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활동은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제협약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조약(CWC),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헤이그미사일행동지침(HCOC) 등이 있고, 국제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²¹⁾을 활용해 국제테러에 연계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는 2009년 5월 현재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94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1년 발생한 9·11테러는 테러 위협을 국제사회의 당면 위협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현재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아프가니스탄군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 및 탈레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국지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따른 UN의 북한 추가 제재안을 통과 시켰고, 2008년 6월 현재 26개국 1만 2천여 명의 유엔평화유지군이 레바논의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AU)’과 UN은 5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 다푸르 지역의 평화 안착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전으로 인한 사회 갈등과 유혈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제 2 절 주변 4대강국의 안보정세와 영향요인

21세기 국제질서의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동북아가 국제정치에서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국제정치에서 독자적 지역단위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순수 지리적 구분의 필요성보다는 철저하게 역내 강대국간 지정학적 동기에 근거하였었는데 6·7개에 불과한 역내국가 중 네 국가가 세계적 강대국이고 이 강대국들의 지위가 냉전종식과 함께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가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으로서의 지리·문화적 의미보다도 정치군사적 의미가 유례없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냉전이 종료된 지 20년 이상을 경과하고 있는데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역내질서가 안정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불확실성과

21) 한국은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전격 가입하게 되었다.

유동성을 내보이고 있다. 국가간 통합과 협력방향으로 진전하는 것도 아니고 냉전시기의 세력경합 양상으로 완전 돌아가지도 않은 채, 갈등과 협력 또는 견제와 의존 등의 이중적인 국제질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최근 핵 실험 등 도발적인 양상으로 동북아지역에 군비증강 및 위기감 조성 유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같은 역내의 중소형 국가에게는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대단히 미묘하고 복잡하여 용의주도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익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는 국가이익을 항구적으로 추구하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안보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하는 장(topos)이자 공간(space)이다. 특히, 경제·문화적 국익보다 안보적 국익은 더욱 그렇다. 한국은 신장된 국력과 격상된 국가위상을 기반으로 하여 역내 질서와 안보상황을 능동적으로 전망하여 중장기 국가전략과 외교안보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하는 계제에 있다. 즉,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정책을 상대적으로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상대적으로 의존적이고 번영을 구상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동일 안보바스켓’ 추진을 자신감과 신념으로 정책화할 필요와 의의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역내질서의 유동성과 정체성을 분석하고 통합과 안정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최근 국내적으로 활발한데, 이것은 정부가 ‘동북아시대’ 구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에 대한 상응한 학계의 반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역내질서에 대한 연구나 전망이 정부의 역내 안보전략 구상에 대해 이론적 논리나 체계를 제공하려는 상보적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역내질서를 미국이 세계정책, 미국과 중국간 세력 경합, 또는 중국과 일본의 지역주도 경합 등 강대국이 지배하는 논리로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위상을 가진 국가는 역내질서 형성을 위해 별도의 역할과 기여를 하기보다는 강대국이 형성하는 역내질서에 적응하는 것이 안보 이익 보호에 유리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동북아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역내질서를 보는 시각도 이와 같이 자유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이 상당히 팽팽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국제정치를 보는 특정한 시각에서 벗어나 대외적 국가이익 보호와 확장의 관점에서 가급적 객관적 현상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구도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안보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대신, 동북아 안보구도를 전망하기 위해, 역내에서 강대국이 질서의 대강(大綱)을 형성한다는 세력정치 논리를 수용하는 한편, 안보구도를 과거 및 현재의 국가 실체와 장기간 형성되어 오는 국가이미지가 동태적으로 조정되는 결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역내 강대국이 동북아 지역의 정치, 군사, 경제 등에 대해 인식하는 결과로서 역내정책을 산출하고, 이들 정책이 지역차원에서 결합되는 과정에서 역내 안보구도가 형성된다고 보는 동태학적 과정에 입각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역내 안보상황은 역내 안보질서 내지 구도를 새로운 방향으로 변경시키려는 요인과 기존 질서 내지 구도를 견지하려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탈냉전이후 지난 10여 년간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 및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국내정치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러시아의 재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정세 변화는 한국의 대내외 정책과 상호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통일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²²⁾

1. 현행 동북아 안보정세

1) 냉전시기의 세력균형적 갈등 잔존

탈냉전이 20년 경과하고 있으나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전반적 정세는 1990년 전후 종식되었던 세계차원의 체제 이념적 냉전양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대 중국과 러시아의 이념적 냉전이 여전히 여전한 가운데 역내 패권억제와 주도권 경합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및 권위주의체제가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잔존하고 있고, 자유 민주 및 시장경제의 미국과 일본이 이에 협력과 견제로써 세력균형을 취하고 있는 양

22) 통일부 통일교육원(2008), 『통일문제 이해 2008』, 서울 : 통일부 통일 교육원, p.28.

상이다. 이들 네 강대국에 의한 안정적 세력구도가 역내에는 대단히 강한 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일 및 한·미 군사동맹이 중·북, 중·러 및 러·북의 정치군사적 우호협력 조약과 쌍립하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남한이 남북한 공존을 위해 경제 사회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확장할 수 있기에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속도가 더디다. 또한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국이 평행노선을 달고 있어 정치군사적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상대방의 지역주도를 견제하고자 역내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에서 각각 21세기에 들면서 강화되고 있는 민족주의가 동북아 지역주의의 발흥을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대미 견제목적에서 최근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있고 이에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강화하여 대응하는 냉전적 형태가 여전하다. 과거 냉전시기에는 소련이 대미 견제를 주도한 대신 세력전이 발생하여 현재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경제가 활성화하고 있고,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법적으로 포기하였고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교적 유연성을 보여 오는 중국이 양안문제를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는 점, 남북한이 군사 및 비군사적 협력과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세기 후반까지 50여년 지속했던 세계차원의 냉전과는 구조와 성격에 차별적인 융통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 미국의 우월적 역내질서 지배

단극질서를 주장하는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세계 군사비 지출의 63% 점유)과 경제력(세계 GDP의 30% 점유)을 통해 단극적 세계지배(Unipolarity)를 유지해오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선의의 패권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외교안보정책 목표의 하나로서 ‘지역패권 등장 억제’를 위해 정치군사적 시도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런 미국의 우월적 위상은 특히 9·11 이후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부터 강화되었으며, 그만큼 역내·외로부터 대테러 전쟁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낸 것도 사실이다. 이라크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평화유지군

파병, 중국과 러시아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극단적 반대 자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유지, PSI 행동결성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 등이 그 사례이다.

미국은 국제테러가 직접적으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동북아에서는 사실상 대테러 전쟁보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정책을 통해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편이다. 그 수단으로서 북한 핵확산 억제, 군사력의 기동성과 투사능력 강화, 대만관계 강화 및 일본과의 안보동맹 강화 등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군사적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²³⁾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위한 ‘의지의 연합’(Coalitions of the Willing)과는 별개로 역내의 특성 및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해 기존의 지역동맹(Regional Alliance)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국제적 지지를 얻기에는 명분이 부적합한 대테러 전쟁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안보정책으로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역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불만대상이 되고 점차 공동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였다. 작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합동군사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한중일 3국의 역사문제 갈등에 대해 미국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례 등은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질서의 한계와 역내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3)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급부상

20세기 후반 전 지구 및 동북아에서 변화된 역사적 사실은 중국의 급부상이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9.4%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1990년대에 중국 위협론이 미국 여론에 등장하였으며, 그 이후 군사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함에 따라 재차 중국 위협론이 무게를 갖게 하고 있다.

23)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이라크 국가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슬람 세력이 역내에 현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 세계 테러 발생 건수는 2000년 429건, 2001년 466건, 2002년 497건, 2003년 809건, 2004년 988건 등으로 증가 경향을 보인다(『세계일보』, 2005년 7월 9일. p.2 기사 참조).

중국은 군사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높여 최근 6년간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으로의 경제 및 군사적 세력의 전이가 향후 지속하여 역내 세력균형에 변화를 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선부국 후 강병 정책기조를 2003년 부국강병 동시추구로 선회하였으며, 국력과 자신감을 얻어 6자회담 개최 주도, 상해 협력기구 공식 출범, 다자안보협력체제 필요성 역설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추진, 대만에 대한 반국가분열법 제정, 중·러 합동군사훈련 실시, 유엔에서의 영향력 제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외교마찰 불사 등 많은 외교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은 역내 안보질서를 재조정하는 인자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안정을 부정하여 강대국간 합종연횡 가능성을 높였으며, 역내 불안정과 유동성이 상당기간 지속하게 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의 개별국익 추구 방식에 일정한 한계를 갖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견제가 시작되었고 일본은 양자동맹을 강화하고 자국 군사력을 증강하는 대신 과거 강조하던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중국 또한 자국의 격상된 국력을 활용하여 대미 견제와 경쟁 및 자국 국경안정 등을 위해 러시아 및 북한과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역사문제, 도서 영유권문제, 대만문제 등에서 일본과의 역내 영향력 경쟁에 서슴없이 들어서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대미패권 도전 가능성은 과거 러시아가 주도하던 냉전과는 다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대립과 협력 방식이 형성되려는 기운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중-러-북한 연합이 미국 주도의 미국-일본-한국에 대립하는 양태 또는 중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 및 미국 주도의 지역 군사안보 유지 등의 양태가 그것이다.

4) 비전통적 안보문제 부상

탈냉전은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상존해오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이나 양안문제 등 전통적 안보문제에 추가하여 각종 비전통적 안보문제가 급속도로 지역문제로 부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류독감, 불법이민, 환경오염, 황사, 위조지폐, 마약거래, 재난구호, 국제테러 등 전통적으로 군

사적 수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초국경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나아가 인간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개별 국가는 물론, 지역하부 및 지역차원에서 안보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비전통적 안보문제들이 탈냉전 이전시기에 양 진영간 전통적 안보위협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전통적 안보위협에 의해 가려졌지만, 냉전종식으로 인종·종교·문화·개인적 이해관계 등이 배경이 되고 연루되어 등장하고 있다.

명기할 점은 이들 대부분의 비전통적 안보문제들이 중국 부상을 기화로 하여 현저하게 대두하였으며, 또한 중국의 영토와 국경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도하여 풀어야 할 도전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접경국가들이 중국의 보편적 가치와 지도력에 회의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들 안보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최근 각별하게 관심을 표명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다자협력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중국이 비전통적 안보문제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 지역차원의 공동안보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중국이 선도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미국이 전통적 안보문제로 지역질서를 주도하고 있음에 비해, 중국은 그 ‘틈새’를 비집기 위해 비전통적인 안보문제를 택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한다. 중국은 이들 비전통적 안보문제 해결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내 위상을 구축하고, 자국의 국경안정을 기하면서 미국의 단극질서도 견제하는 삼중효과를 겨냥하는 셈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공동대처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국제적 인구이동과 활동영역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탈냉전 여건에서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2. 주요 역내정세 영향 요인

앞에서 검토했듯, 동북아에 냉전과 탈냉전의 특징이 복합적이고 다소의 상충적으로 역내정세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탈냉전이후 역내 안보구도

가 특정한 틀로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역내국가에 공통적이고 향후 역내 강대국의 대동북아 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이들 요소들은 현재 지역내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양면적 행동을 자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시장경제를 권위적 정치체도로 관리하는 중국식 고성장 전략이다. 2020년까지 ‘잘사는 중류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小康社會)로 경제성장률을 8%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정책은 역내 강대국에 의해 중국 위협론을 재인식하게 하고 성장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잠재력이 적지 않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고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내외의 FTA 추진과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외교중점을 두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고성장 방해요소를 예방하고자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와 국경안정을 견지하기 위해 고도의 실용주의적 외교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지속적 고성장은 세력전이를 더욱 촉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은 중국의 역내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국제관계를 상호의존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거나, 또는 역으로 역내 질서의 불안정 요인이 심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9·11테러 경험으로 인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이다. 미국은 국제테러 재발방지를 일차적인 세계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향후 대량살상무기가 국제테러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여 비확산정책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석유자원 선점경합에 대한 반동으로서 국제테러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특히 부시 행정부 1기는, 대테러 전쟁 수행으로 세계 패권적 지위유지 또는 강화를 국제테러 위협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었으나, 2기에 들어와서 수정되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국가는 역내 국제테러 발생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동참하거나 이를 지지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통해 MD 구축 등 군사력을 불필요하게 증강하거나 대외문제에 개입하려 함으로써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반대 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이다. 일본은 냉전체제 종식을 전후하여 국가 정체성 논쟁을 거치면서 보통국가 내지 정상국가로서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경제대국이자 통상국가가 냉전 종식에 따라 안보문제를 미국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보통국가처럼 국가위상에 상응하는 독자적 군사능력을 보유하여 국제안보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점차 일본내 여론을 지배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평화헌법 개정예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²⁴⁾ 이런 동향은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급부상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우경적 여론이 대응하여 국가주의와 국제 평화유지 역할을 강조한 결과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76년 자국 방위력 구상을 최초로 공표한 방위계획 대강을 냉전 이후 1995년 수정하였다. 동 1995년 방위계획 대강은 자위대의 국제공헌과 미·일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2004년 재차 수정하여 국제테러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보다는 대처를 강조하여 방위력 증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역내 민족주의의 부상이다. 역내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결과, 또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반동의 일환, 또는 역내국가간 경합과 갈등의 원천 등을 배경으로 하여 역내에 국가적 민족주의가 탈냉전 이후 급부상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역내국가가 동북아 지역주의를 향하여 상호협력을 추구하고 상호의존을 인정하는 계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주의의 경향은 상호 신뢰구축을 어렵게 하고 동북아 지역의 각종 안보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협의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다섯째, 냉전종식과 세계화로 역내외 국가관계 내지 안보의식의 전환이

24)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연합국 총사령부가 2차대전 직후 1946년 11월 제정한 것인데, 그 이후 미국은 이를 후회하였다. 일본은 1992년 유엔 평화유지법 제정으로 캄보디아에 파병하면서부터 국내여론은 군사력 증강에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로서 평화헌법 제9조의 집단자위권 행사 부정으로 인식해 자위대 전력증강과 방위정책에 관련된 일련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 오고 있다. (워렌 코헨,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세봉·이수진 공역(2003), 서울 : 문화디자인, pp.52-54참조).

다. 냉전종식은 세계수준의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을 줄어들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는 국제관계를 힘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보편적 가치와 인식이 강조되어 상호협력과 의존의 관계로 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과 OSCE, ARF, NAFTA 등 탈냉전으로 지역적 경제안보 협력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는 시민단체의 발달과 권위주의 정치체제 이념의 해소에 힘입어 전쟁수단의 부도덕성, 방대한 전쟁비용과 인간안보 등이 강조되고 경성국력에 못지않게 연성국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중시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한편으로 탈민족주의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지역주의를 발전시키고 역내의 국가관계에서 협력외교와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미래 4대 강국의 안보구도 전망

역내국가의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적 산물인 면도 있지만 특정 지도자의 가치관과 정치노선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이들 국가들이 산출해내는 동북아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자국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여 일정한 패턴과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대외정책 패턴과 성격이 바뀌려면 정치사회적 대사건이 발생해서 당해국의 국가가치와 이익에 절대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당해국의 대외정책 패러다임에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내 4강대국의 특정 행정부의 정책을 단기적으로 식별해서 대동북아 정책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당해 국가가 오랜 기간 추진해오는 역내정책의 성격과 경향을 검토함으로써 당해국이 미래에 동북아에 대해 펼칠 수 있는 정책방향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동북아 안보구도에 대해 설득력 있는 전망을 하기 위한 기초를 얻을 것이다.

1. 역내 강대국의 대동북아정책

1) 미국 : 지역패권 억제와 WMD 비확산

미국은 냉전시기에는 공산권의 세력억제를 최우선으로 삼았다가 탈냉전 초기에는 자국의 초강대국 지위유지에 일차적 관심을 두었고, 9·11 이후에는 자국 본토안보 보장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둔다. 동시에 우월적 지배체제 유지를 대외정책 기조로 택하고 있다. 그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확산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대테러전을 상호 연동하여 활용하고 있다.²⁵⁾ 특히, 초강대국지위에서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담당하기에 필요한 전략적 유연성과 연성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외교 등 경제군사 및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²⁶⁾

미국은 19세기 이래 동북아시아 정책으로 통상강화, 지역 안정자, 유일패권, 패권억제 등의 국가이미지를 유지해 오고 있다. 실제,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1930년대 전후 러시아 세력 확장 때문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자국 패권과 본토 안보 확보에 초점을 두고 냉전 시기 유럽에 버금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이 붕괴한 1992년 이후 중국을 미국패권에 대한 도전국으로 간주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 및 인도 등과 전략적 협력이나 연대를 필요시 모색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동북아에 한정되는 정책보다는 자국의 세계전략과 아태지역 전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북아를 그 하부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지역질서 주도에 대한 경합이 동북아에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미국은 보다 광범한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우월적 영향을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부상을 역내 패권등장 억제에 대한 가장 심대한 도전요소로 간주하고 역내 균형자 내지 안정자 역할을 견지하고자 하여 미·일 및 한미동맹을 아태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는 한편 호주와의 동맹강화와 해외주둔 미군의 유연한 재배치 등을 발전시키고자 구상하고 있다.²⁷⁾ 미국은 특

25) 미국의 대테러전이 무력에 의한 강압이라는 인식과 대테러전을 위한 의지의 연대에 동참하는 국가가 동맹우호국들이 많이 제외됨에 따라 부시행정부 2기는 대테러 정책을 민주평화와 자유확산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대테러전의 명분을 과도하게 강조함에 따라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패권지위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26) 외교안보연구원(2009), 『2009 국제정세 분석』, pp. 15-20을 참고하여 재정리.

27) 이것은 미국이 군사전략으로 채택한 전략적 유연성, 태평양사령부의 괌 기지 확장, 주

히, 대만이 중국에 흡수 통일되는 경우 태평양 영역의 해상교통로에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에 대한 외교 안보적 레버리지가 상실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가장 주시하고 항공모함과 중잠수함 등의 확보 가능성을 대중국 군사적 당면과제로 본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이 북한이나 특정지역에 국한된 압력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의 WMD 비확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간 군사협력장치로서 발전시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역내지위를 장기적으로 견지하기 위해 역내 다른 국가에겐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이후의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조정하여 전략적 연대나 동반자관계를 활성화할 것이다. 즉, 양자동맹을 토대로 대일본 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대중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군사적 억지, 경제적 접근의 방식을 선호함으로써 중국을 위협시하기보다는 중국의 책임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동북아에 대한 우위적 위상과 영향력을 지속하려 들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이런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파생된 거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대외영향력 행사를 제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중국 : 중화패권주의 장기 탐색

중국은 19세기 초반 아편전쟁을 계기로 국제정세에 편입된 이래 평화공존, 양대진영론, 중간지대, 중화통합 등의 정치이념에 입각해 대외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탈냉전이후 대외정책 기조로서 화평발전과 중국통일국가 기반 건설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종합국력을 신장시켜 유소작위를 표방하고 있듯, 국가 위상이 상승하고 국내적으로 내셔널리즘이 고양되면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²⁸⁾ 중국 안보전문가들은 다극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대체

일 및 주한 미군 재조정 등의 배경이다.

28) 김재철(2002), “패권, 다극화, 그리고 중·미 관계 : 세계질서를 둘러싼 경쟁?”, 『국제정치논쟁』, p.42.

적으로 미래안보구도에 대해 비관적인데, 향후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대만문제, 석유가스 확보, 북한 핵 해결 방법, 우주개발, 군사력 증강 등 다섯 분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중국은 자국의 급부상과 더불어 대외정책을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컨대 주요 대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국제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 다자외교 주도 및 적극 참여, 경제협력 강화 및 대만 문제의 안정적 주도 등을 외교 중점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지는 않더라도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현대화와 대내적 안정을 당면과제로 안고 있는 중국은 자국이 거의 예외 없이 연루되고 있는 각종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보다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한 동북방면의 국경안정문제를 완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역내 지역질서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기를 희망하며 자국 역할을 확대해 나가자 한다. 예컨대 북핵 해결을 위한 중재, 미국의 양자 동맹과 군사적 배비, 동북 지역의 역사문제, 해저 자원 확보, 교역 통상 등 동북아 지역의 안정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다자안보협력체제 결성에 대해 2000년 이전에는 극렬 반대하였으나 최근 상하이 협력기구(SCO) 발족, 역내 FTA 제의, ‘아세안+1’, ‘아세안+3 회의’ 동참,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여 및 광역메콩강 하류지역(GMS) 경제협력 6국 정상회의 등 중국 국경의 4방면에 걸쳐 다자 협력체제 결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공하는 경우 그 성과의 일환으로서 동북아 다자협력체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발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역내국가와의 공동협력에 대한 자심감이 생겨나고 또한 다자협력에 대한 외교적 인센티브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외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있는 중국이 역내 개별 국가에 대해 보이는 정책에는 이중적인 면이 강하다. 즉, 미국에 대해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일본에 대해 경제협력을 추진하되 지역

패권적 행동을 경계하며 러시아에 대해 군사 및 비군사적 협력체제 강화로 국경안정을 확보하며 한반도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되 남북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동북아를 위한 외교적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및 군사적 부상과 1980년대 이래의 ‘선 부국 후 강병’ 정책을 2000년대 들어 ‘부국과 강병 동시병행’ 정책으로 변경한 배경 및 국방비 급증 등에 대해 주변 강대국들이 지역 패권과 역내 안보위협 요인으로 해석하는 동향에 관련해 우려하기도 한다. 중국은 2004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나타나 있듯이 세계적인 군사혁신의 추세에 부응하여 중국적 군사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보화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²⁹⁾

3) 일본 : 대미동맹과 국제평화 역할 강화

일본은 탈냉전 및 1992년 전후 평화헌법 재해석 제기 이후 대외정책 기조를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한 최적 대응에 두고 세계화에서 파생하는 안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대미 안보협력과 유엔 중심의 안보평화 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자국이 속해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해 일본은 19세기 명치유신 이래 탈아입구(脫亞入歐) 정책을 추구하고 20세기 전반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는 등 동북아를 초월하는 정책을 선호해 추구해왔으며, 동북아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안보사안에 대한 이해 정도가 약한 셈이다. 1980년대에는 특히 동북아 다자협력을 강조했었지만 최근에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듯, 동북아보다 동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안정을 중시하고 동북아 역내 안보문제들에 대해 항상 낙관적이지 않다.³⁰⁾ 극동 러시아의 핵전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영향력 확대,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통한 핵능력, 미사일 및 해군력 증강과 우주개발 박차, 북한의 각종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29) 중국 국방부(2004), 『중국 국방백서 : 2004년판』, 국방정보본부 역, pp.8-9.

30) 일본정부는 2002년 1월 고이즈미 수상의 싱가포르 연설 「함께 추진해 나가는 커뮤니티」, 2003년 12월 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축, 2004년 9월 유엔 총회 연설 및 2005년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언급했으며, 점진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

배치 등을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어떠한 외교구상이나 비전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되며, 즉 일본 스스로 안전보장 협력과 미·일 동맹의 틀을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누적되어 일본정부와 점차 다수의 여론은 주변지역으로부터 자국 안전을 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³¹⁾ 나아가 일본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가 분쟁해결을 위해 부전 공동체를 발족시켜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대미 동맹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즉,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자체 방위력 증강과 대미 안보동맹 및 기타 유형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본의 원칙은 첫째, 국제적 안전보장 환경개선과 합치되고 둘째, 세계 경제 성장과 부합하고 셋째 자유민주 등의 가치와 부합하는 공동체 형성 등이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을 위한 전략은 경제협력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와 안보면의 협력을 촉진하고 다자안보체제 이전에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군 주둔을 필요로 하고 미·일 동맹을 견지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대미동맹국으로서 사실상의 동맹관계에서 상호 안보협력을 증진하기를 기대하며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편 대북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우선적 관건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스스로 비핵 강대국과 유일한 원폭 피해국의 이중적 이미지 및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실체를 적극 강조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보유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미동맹을 강화하고 대 유엔 지위를 확장하여 세계화와 국제평화 기여 등의 정책 추진도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중국 부상과 관련해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지역질서 주도에 있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중국 협력 추진과

31)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006년 2월 중순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5%가 개헌에 찬성하고 27%만이 반대하고 있다. 개헌을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서 시대에 맞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중앙일보, 2006년 3월 6일, p.12).

대미동맹의 동시추구 문제를 심각한 외교적 선택과제로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러시아 : 전략적 대미 견제와 영향력 회복

“러시아는 2025년에 더욱 부유하고 강력하며 당당해질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제약조건이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달성 할 러시아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³²⁾

러시아의 동북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균형적이다. 1990년대 초부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강조해오는 한편,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부정해오며 2001년 신외교개념에서는 남북한 간 균형정책을 채택한 바도 있다. 2005년에는 중앙아시아 주둔 미군 철수를 SCO를 통해 중국과 공동으로 요구했고 서해지역에서 최초로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였다. 러시아는 예컨대 남북한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지지 또는 석유 가스 공동개발 및 수송로 설치 등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북아에서의 균형과 지역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대신,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역내 강대국 중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러시아가 택하고 있는 대동북아 정책은 전반적으로 20세기 후반 소련 붕괴 후 국경 안전, 강대국 부활, 영향력 회복, 대미 견제, 신세력균형 등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 최장의 국경을 따라 선린 우호벨트를 형성하는 한편 대테러 예방적 타격 및 방어적 핵 선제공격 개념을 군사독트린으로 책정하는 등 미국에 대해 우호와 견제의 이중적 입장에 있으며 이런 의도에서 중국에 대한 틈새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으로서 러시아내에 동북아 지역은 협력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탐색 노력이 계속되는 한편 냉전종식 이후 형성된 힘의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가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시각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의 역내 정책은 크게 군사 및 경제적 측면에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관점에서는 역내국가 간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는 전쟁이나 무력투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을 강

32) 미국 국가정보위원회(2009), 전제서, p.83.

조해나가는 한편, 미국의 지역패권을 견제하는 데 상당한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극동함대가 지속적으로 전력 발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극동군관구 역시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개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극동지역 핵전력은 대륙간탄도탄과 전략폭격기가 시베리아 철도선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핵잠수함은 오희츠크해를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전개, 중국에 대한 군사판매 증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긴밀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나토의 동구권진출을 확대하고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 등을 러시아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거나 보전하는 정책을 내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이라는 에너지 대국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과거의 강대국 위상을 되찾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³³⁾ 특히, 하루 14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통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역내국가간의 협력을 구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과 노동제공의 관계에서 러시아는 동북아의 협력을 구할 것이며 이로써 이익도 가장 크게 볼 것이다.

문제는 대내 정치적 권위주의로 대외 경제협력의 효율성이 손상되어 역내의 영향력 회복이 자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역내 안보구도에 대한 영향 변수

우선 동북아 지역 안보구도는 현실적으로는 역내국가가 대외적으로 전개하는 정책간의 협력과 갈등의 순환체계에서 산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역내 안보상황, 이에 대해 각국이 인식하는 정도와 의도하는 국익판단, 구상하는 세계 정책과 그 하부체계로서의 대동북아정

33) 조선일보, 2006, 12, 6, A20면.

책 내용과 시행, 그리고 역내 국가들의 세력에 의해 안보구도가 형성된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에 한정하는 안보구도를 예견하거나 전망하기보다는 대체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하부로서 전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역내 강대국이 세계국가로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인도와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활성화, 새 유형의 미국 지배체제 유지, 급진 이슬람 세력의 세계화 도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인간안보 침해 등 포괄적으로 미래예측을 하고 있으며, 랜드 연구소는 미래안보상황을 미국 단극체제 지속, 민주적 평화 확산, 주요 경쟁자 부상, 경쟁적 다극체제, 비국가 행위자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혼란과 무정부 상태 등 여섯 가지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제정치학자 아이켄베리는 미국의 장기적 대외정책 방향으로서 현실주의에 입각하는 선택적 개입,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그리고 강경 신보수주의 등을 상정하고 대체적으로 첫째와 둘째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 경제분야 : 중국 경제력이 미국을 조기에 추월하기 쉽지 않다.

동북아지역 안보구도 형성에서 경제력이 고려되는 비중은 탈냉전으로 점차 크게 인식되고 있다. 동북아가 경제생산 규모에서나 교역규모에서나 세계최대인 권역으로 부상하였으며 그 잠재력도 대단하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조기 경제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계속하여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써 미국 경제를 조기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체로 중국이 미국 경제규모를 GDP 규모면에서 능가할 수 있는 시기로서 2020년 이전, 2020-2050 어간, 그리고 절대적 불가능론 등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의 주요한 경제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GDP 비율은 2030년 이후에도 중국에 비해 압도적 차이(21.7% 대 14.8%)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GDP 구성비는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흐름과 상관없이 대체로 20%대를 줄곧 견지해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오고 있는 중국 경제가 향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에너지 공급제약, 지역간 빈부 격차, 환경개선 부담, 정부 관리지배 능력 등의 대내외적 발전 악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것이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산업생산 대신 세계 금융과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지배력을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BRICs의 발전과 같이 경제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쌍둥이(재정 및 교역) 적자 등으로 인한 대내적 경제 취약성이 미국의 패권적 국제위상과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핵심적 국가에 해당하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GDP 구성비의 합계가 2030년에 23.9%가 되어 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들 3국이 주축이 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발족에 따르는 잠재력을 간과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³⁴⁾

2) 군사분야 : 역내 군비경쟁에서 우열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 특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군비증강 경향이며 이 경향은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중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적으로 연도별 군사비 증가가 4-6%에 해당하나 동북아 지역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미국과 중국의 높은 군사비 증가율이 주도하고 있는데다가 중국과 일본이 지역 질서주도를 둘러싼 경합 때문에 신뢰구축이 약해 군비증강을 자극하고 있는데도 기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역내 안보역할 분담 기대와 일본의 국제안보역할 담당 및 대중국 견제심리가 결합되어 일본이 방위력 증강을 도모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30년 세계 패권능력 측정을 보듯이 군사력 수준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34) 전경만(2005), “동북아 중장기안보구도의 분석적 전망”, 서울 : KIDA, pp.1-2 재정리.

<표 2> 2030년 세계패권능력 추정

구분	미국	중국	EU	일본	러시아	회교권
군사력	5	1	2	1	3	0
외교력	4	3	1	3	1	0
정치력	2	3	2	1	1	2
경제력	3	3	4	4	3	2
총계	14	10	9	9	8	4

출처: "The Next Balance of Power: A Geopolitical detective story" *The Economist* (January 3-9,1998), p.18.

역내 국가들이 상호협력과 의존관계에 기반하는 공동안보 개념을 갖지 못하는 한 이런 추세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 등 동북아 지역 내의국가들 사이에 상대적 군비경쟁 양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역내 핵보유 및 비보유 국가들이 공히 군사태세를 9·11테러이후 보다 공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역내 핵보유 국가들의 선제적 핵사용 전략기조의 강화, 미국과 일본의 MD체제 구축 공동추진,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MD 대응체제 구축협력,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간 우주공간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경쟁, 지상병력 감축 대신 해·공군력의 투사능력 첨단화, 그리고 역내 모든 국가들의 혁신과 변혁을 통한 군현대화 경주 등은 중장기적으로 역내 안보구도가 세력경쟁 방향으로 진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역내 군비경쟁 가능성은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이 도전받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공고하게 유지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보다 질 및 양으로 20-30년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최강대국 지위가 도전받을 가능성은 경제적 측면에 비해 훨씬 낮을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기간보다 더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³⁵⁾

35) 전경만(2005), 전계논문, pp.2-3 재정리.

3) 외교분야 : 미국이 외교의제를 계속 선점할 것이다.

향후 역내 각종 외교안보 의제를 제기하고 관리하며 협력을 구하는 일을 주도하는 국가가 역내 안보구도를 형성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냉전 종식으로 외교의제가 다양해지고 각국이 세어진 발언권 때문에 의제관리 여건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외교력과 문화 및 이념적 가치 등이 경제력과 군사력에 못지않게 외교안보 의제 선점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나토확대, 대테러 국제협력,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유엔개혁 등 외교의제를 비교적 쉽게 선점해오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힘의 정치를 통해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추구해 왔다고 비판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간 갈등이 대표적이고, 이라크 전쟁과 유엔 개혁 등을 둘러싸고 강대국간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 갈등이나 작년 12월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배제된 것 등은 그런 불만이 표출된 사례이다. 역내에서도 미국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사건 이후 보이고 있는 최근의 외교행태는 사실상 외교의제는 선점하지만 지도력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중국 주도로 진행되는 점이나 중국과 일본의 과거사 갈등에 대한 미국의 속수무책 입장 등은 이에 관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 역내 외교안보 사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개입을 통해 다변적인 협의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역내 공동이익을 도모한다는 의지를 주변국에 밝혀 나가기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즉, 미국이 역내 외교적 지배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또는 단극적 질서에 고착되지 않고 실용적 다자주의 또는 실용적 현실주의 외교노선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 않다면 역내의 각종 비전통적 안보문제뿐 아니라, 각종 전통적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외교의제 선점 및 관리 능력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지리 및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이 분야에서 주변국을 상대로 그 역할을 분담할 능력과 의사를 적지 않게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 핵 문제가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이후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며, 한국·중국·일본 3국 간 현안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

역사문제·도서 영유권 확정 문제 등에 있어서도 당사국의 협력과 이해를 유도하지 못하고 기존 관성대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취해온 대주변국 외교안보정책의 역사를 보면 중원(heartland)을 보호하기 위해 변방통제와 영토를 외교력과 군사력의 안배를 통해 잘 관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주변국 입장보다 자국 중원안전을 유일한 목적으로 했다는 약점이 있으나 향후 역내 외교사안 관리에 책임있는 행동을 점진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 문화 및 이념 분야 : 미국이 가치와 이념을 선도할 것이다.

탈냉전과 세계화와 정보화의 지구적 트렌드로 인해 문화와 리더십과 가치인식 등 연성국력 요소가 국제정치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조셉 나이 등 자유주의적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탈냉전의 대표적인 국제관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이 상호 문화 및 이념적 공감대가 공고하면 그만큼 역내 정치지도자 간은 물론 주민들 간에 상호협력과 의존에 대한 인식도 훨씬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역내 국가들은 사실상 정치이념, 경제운영방식, 문명 및 국민정서, 생활문화, 역사 등에 있어 스펙트럼이 광범하여 공통분모가 매우 적다. 문화와 역사면에서 역내 4국(남북한·중국·일본)만이 동질성을 다소 가지고 있을 뿐 미국과 러시아의 문화·문명은 이들 4국과는 차이가 크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에 대한 소속의식, 지역주의, 또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미약한 문화와 이념적 동질성을 극복하면서 역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을 개발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더구나 지리적으로 동북아를 형성하면서 4국의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가 동북아 지역주의 발흥을 압도하게 되면, 역내 안보질서는 상호 배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성을 감안하면, 동북아에 대한 지난세기 동안 깊이 진출해오는 미국문화가 지역내 다기한 대중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포괄하는 경우, 미국이 어느 국가보다 더 유리하게 동북아 문화와 가치이념의 배타성을 극복하면서 미국적 정치·사회·문화적 이념적 지도력을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상당한 기간 동안 역내 강대국 중 미국을 능가할 수 있

는 연성국력을 보유하고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가치인식, 리더십 및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를 보편적 수용성에 있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미국은 이미 국가매력을 종합국력 개념에 포함시켜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대외적 국가이미지와 매력을 증진하여 현명한 강대국으로서 역내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추진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국 등 다른 역내 강대국이 미국에 대응하여 역내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나 지도력을 초국가적으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역내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보편적 가치기준)가 일반화되어야 하고 이로써 외교안보 협력의 공통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중국 지도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중국 지도부가 좀 더 자유·민주·개방·인권·형평 등 보편적 가치를 대폭 수용한다면, 중국의 지도력에 대한 역내 수용 폭도 조기에 훨씬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³⁶⁾

3. 세 유형의 역내 안보구도 전망

앞에서도 살폈듯, 역내 네 강대국은 냉전종식이후의 유동적인 역내질서가 자국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대외 및 역내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성국력과 연성국력 등 향후 안보구도 형성에 대한 잠재력을 감안하는 경우에는 역내 안보구도의 윤곽을 대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한다. 향후 동북아 지역에 형성될 수 있는, 보다 확실성이 높은(more likely) 안보구도 한가지와 덜 확실성이 있는(less likely) 안보구도 두 가지를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 유형의 안보구도는 각각 성격이 뚜렷하게 다르지만 역내 국가들 간 협력과 갈등의 양태에 따라 장기적으로 시계열적인 연계성을 지닐 수 있다.

1) 미국 우위적 다강체제

미국이 우월적 정치군사적 위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변 3국이 강화된

36) 전경만(2005), 전제논문, pp.4-5 재정리.

강대국 지위를 견지하는 체제가 확실성이 보다 높은 역내 안보구도에 해당한다. 즉, 국제관계에서 패권지위 유지에 여전히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지도적 정치이념도 확산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면 미국 우위적 다강체제가 여전히 지속할 것이며 적어도 향후 30년은 그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지나친 일방주의 외교 정책에 우방국조차 반대하거나 불만스러워 하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용적 다자주의 및 미국적 대중문화와 공공외교 등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구도 하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세계전략과 역내 정책 전개와 행동에 따라 세 강대국과의 상호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견제와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로 인해 계속적으로 견제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에 미국 우위적 다강 구도는 조만간 미국 중심의 패권대 중국 중심의 반패권의진영체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역내 각종 갈등사안은 고착되어 해결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이 패권국가와 도전국 간의 역학에 관한 역사를 잘 인지하고 선용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보여 나간다면, 동북아의 미래 안보구도는 오히려 미국 주도의 강대국 협력체제(concepts of powers)양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력 및 이에 부합하는 군사적 부상,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내실화와 역내 영향력 확장이나 일본의 역내 역할 증대 등이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동북아에서의 미국 우월적 지위가 장기화되지 못하게 하는 도전으로서 배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민주의 정치이념과 자유무역주의를 계속 선점해 나가면서 미국식 문화적 침투능력 등 연성국력의 활용으로 미국 주도의 강대국 협력체제가 역내에 정착하도록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2) 패권 대 반패권 양진영 체제

중국이 자국으로 전이되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외교와 문화적 역량을 결합해 미국 중심적 역내질서에 대해 도전하는 경우에

역내 안보구도로서 양 진영 체제를 상정할 수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의 협력관계를 주도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정학적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지역주도 경쟁에서 기선을 잡는 경우인데, 확실성은 낮으나 역내 강대국들이 보이고 있는 세력균형이나 세력 안정화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동북아의 안보구도로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역내 4국 간 미국 중심의 패권 지지 세력과 이에 대립하고 견제하는 중국 중심의 반패권 세력간에 진영을 형성하는 안보구도는 이미 20세기 중반에 경험했던 냉전과 유사한 것이 될 것이다. 반패권 진영의 중심축은 냉전당시에는 러시아였으나 미국 중심의 패권 지배에 도전하는 중국이 그 위치에 오름으로써 신 냉전 양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특히 대만문제, 한반도 문제나 에너지 확보문제 등 역내 강대국간 이해갈등의 소지로 불안정성이 사라지지 않고 자칫 무력갈등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중국과의 지역주도 경합적 위치에 있는 일본은 기존의 대미동맹 연장속에서 미국 패권을 지지하는 진영에 남을 것이다.

특히 향후 언젠가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이 서서히 쇠퇴하는 동안 도전국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세력전이의 과도기적 질서를 상정하는 경우 이런 양진영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역내 협력보다는 갈등 내지는 견제가 구조화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보다 군사력과 같은 경성국력의 중요성이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

문제는 중국이 군사력을 제외하더라도 정치적 지도이념과 문화적 흡인능력 면에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가인데, 이런 연성국력 발휘측면과 중국의 대내적인 취약점을 감안하면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 중심의 패권 도전적 구도는 상당기간 역내에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대신 이런 구도로의 진전 가능성은 미국으로 하여금 일방적 대외정책 집행을 협력적 대화방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경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불균형적 다극 체제

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보다 확실성이 낮게 상정될 수 있는 역내 안보구도로서 미국이 대내외적 상황과 배경에 의해 개입주의를 후퇴하고 고립주의로

대외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역내에서 패권적 지위를 양보하거나 경쟁에서 약화되어 역내 4국이 다소의 불균형적인 다극체제를 형성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이런 다극적 안보구도는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개입주의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또는 전략적 초점을 아태지역을 택해 보다 확장된 지배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학적 이유로 견제와 경합의 지배논리만이 상존해 있는 동북아를 의도적으로 양보하는 경우이나 상정 가능하다.

이 구도 하에서는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후퇴로 군사력과 경제력은 물론, 외교역량이나 문화 이념적 지도력이 서로 우위가 다른 주변 4국이 다극을 이룸으로써 어느 한 주변국이 역내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이 20세기 초반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경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지만, 작금의 역내 국가들의 국력수준 변화와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 실체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정책, 동북아에 대한 이해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구도가 동북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예상되는 안보상황도 그 당시와 유사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역내 강대국은 핵보유 여부나 수준, 인구나 영토규모, 문화적 지배력 등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극체제라 하더라도 실제 불균형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이 안보구도 하에서는 한반도의 전략적 비중이 고조될 수 있는데, 역내에 세력균형이 4국 간 형성됨에 따라 한반도의 대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연대에 따라 역내 전체적 세력균형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안보구도와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점 하나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동북아 안보구도를 전망하면 미국과 중국간의 세력 경합이 좀 더 단기간에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미국 우위의 다강체제가 장기간 보장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는 강대국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 견제와 갈등 질서를 면하기 어려운 반면, 동남아는 ASEAN³⁷⁾ 중심의 다수 중소형 국가들이 역내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진영체제가 조기에 진전할 수 있겠지만 보다 큰 지역협력체의 울타리에서 양진영체제가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7) 2005년 12월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 직후 한·중·일 3국과 ASEAN 10국 및 호주·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정상들은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었다.

제 4 장 미래전의 양상 및 한국의 군사전략

제3장에서 알아보았듯이 통일이후에도 미국이 우월적 정치군사적 위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변 3국이 강화된 강대국 지위를 견지하는 체제가 확실성이 보다 즉, 국제관계에서 패권지위 유지에 여전히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지도적 정치이념도 확산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면 미국 우위적 다강 체제가 여전히 지속할 것이며 적어도 향후 30년은 그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한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군사전략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후에도 미국과 함께하는 군사전략을 구상하고 미국 주도의 군사전략에 기초한 한국의 군사전략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9.11테러이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는 아래와 같다.

〈표 3〉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구분	걸프전(1991)	이라크전(2003)
전쟁 목표	• 쿠웨이트 실지회복	• 핵 및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진원지 제거 • 사담후세인 제거로 이라크국민 해방 • 이라크에 자유민주정부 수립
안보 전략	• <u>봉쇄/억제전략</u> • 국제제도 중시(UN/국가간 조약) • 다자간 협력주의 /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해결 • <u>방어전쟁 기초</u> ※ 조지케넌 주창	• <u>일방주의 / 선제저지(선제공격)전략</u> - 미국의 독자적 판단 - 일방주의/무력수단으로 해결 - <u>선제공격 기초</u> ※ 폴 월포워츠 주창

〈표 3〉에서 보듯이 미국은 9.11테러이후 기존 걸프전에서 구사하였던 봉쇄 / 억제전략을 포기하고 공세전략인 일방주의 / 선제저지 전략의 선제공격 기초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군사전략 또한 공세적인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표 4〉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구분	걸프전(1991)	이라크전(2003)
군사 목표	• 쿠웨이트 지역의 이라크군 격퇴	• 이라크군의 완전무장 해제 • 사담 후세인 제거 • 미국에 유리한 종전 처리
군사 전략	• 콜린 파월 독트린 ※ 중무장지상군중심의 방어전략 (압도적인 지상군배치+극히 한정된 정밀유도무기+대량화력전) - 대규모 공습후(38일간) 지상작전 실시(5일간) - 무기사용 비율 · 첨단무기 : 9%, 재래식무기 : 91% · 동원병력 : 82만명 (지상군투입 : 37만5,000명)	• 도널드 럼스펠드 독트린 ※ 충격과 공포전략 (소규모 신속대응군 배치+대량정밀 유도무기+특수부대 운용) - 첨단무기 공습과 동시에 지상군부대 작전실시 - 무기사용 비율 · 첨단무기 : 77%, 재래식무기 : 23% · 동원병력 : 32만명 (지상군투입 : 17만1,000명)

미국의 군사전략은 방어중심에서 선제공격으로 변모하고 있고, 한국 또한 미국의 전략 범주내에서 군사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는 한국의 통일을 2025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걸프전·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도출된 전쟁결과는 통일한국의 장차작전과 상당부분 일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1 절 장차 예상되는 미래전의 양상

냉전 종식과 9.11테러이후 안보분야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안보개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위협이 다양해지고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된에 따라 안보영역이 확대되었다.³⁸⁾ 한반도에서의 미래에 예측 가능한 전쟁양상 또한 빠른 변화와 속도의 시대, IT시대 등으로 축약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군사전략과 작전술, 그리고 전쟁사 수업을 2개월에 걸쳐 연구하고 배운 결과 나름대로의 미래전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을 고려시 미래전의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38) 김강영(2005),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부산 : 신지서원, p.175.

전, 걸프전이 현대전쟁의 양상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현대전 양상은 걸프전에서부터 이라크전을 기초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전의 주요양상을 ①5차원전(전장의 확대), ②네트워크 중심전, ③정보전·사이버전, ④효과중심 정밀타격전, ⑤마비중심의 신속 기동전, ⑥비선형전, ⑦비살상전, ⑧무인로봇전, ⑨비대칭전 그리고 ⑩동시통합전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미래전 양상 중 5차원전은 전장공간이 기존의 지·해·공 3차원전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추가된 대 변환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중심전, 효과중심 정밀타격전, 마비중심의 신속 기동전과 비선형전은 전장운영방법이 정보·지식·기술 중심으로 탈바꿈 되는데 변혁이며, 비살상전과 무인로봇전은 전쟁수단의 혁명적 변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끝으로 비대칭전과 동시통합전은 이러한 미래전의 제반 양상들을 전장에서 종합 내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미래전 양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1. 5차원전(전장의 확장)

1) 미래 전장의 변화

무기체계의 능력이 획기적으로 광역화, 장사정화, 정밀화, 고위력, 고기동화,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전장의 공간(범위)와 성격(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의 5차원에서 장거리 첨단정밀무기를 작전특성에 맞게 연계하고 통합하여 동시적·병행적·효과기반적·핵심지향적으로 내부의 전략적 목표인 전쟁지도부와 국가지휘구조를 먼저 타격하여 붕괴시키고, 그 효과가 외부로 퍼져나가 국가전체에 변화를 유발시킴으로써 단기간 내에 전쟁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했으며, 이 같은 국가체계별 타격은 충격과 공포전력의 핵심적 수단이 되었다.³⁹⁾ 미래전에서는 지상·해상과 같은 수평적 공간(좌표)보다는 지하·해저·공중·우주의 수직적 공간이 더욱 중요시 된다. 현대전에서는 제공권 장악이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미래전에서는 제우주권

39) 조영갑(2009), 『현대전쟁과 테러』, 서울 : 선영사, p.372.

장악이 승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⁴⁰⁾

미래에는 사회와 군대가 지식·정보화됨에 따라 전장이 ‘현실세계’에서 ‘가상현실세계’로 크게 확대된다. 정보사회에서는 사이버세계의 정보·지식 흐름을 혼돈·마비시키면 그 사회와 군대의 기능이 순식간에 무력화된다. 과거 아날로그시대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양상이다.

미래전장은 ‘디지털 네트워크’ 전장이다. 전자에 참여하는 모든 전투원, 부대, 플랫폼(platforms)들이 분산되어 있으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 공유’하에서 매우 빠른 템포로 전쟁·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전장은 합동전장이다. 전장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지·해·공의 전력이 용이하게 ‘합동’될 수 있고, 전쟁과 관련된 국내의 유관기관들은 물론이고 국제 기관간의 ‘협력’ 및 연합도 촉진되며, 전·후방의 전장이 통합되고, 가용한 모든 전쟁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유인체계와 무인체계, 하드 전력과 소프트 전력, 살상무기와 비 살상무기 등을 목표 지향적으로, 조직적으로 결합·통합할 수 있는 전장이 된다.

미래 전장에서는 전쟁수단의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근접전장보다 적지 ‘중심전장’, 전술적 차원보다 ‘작전적·전략적’ 차원의 전장, 병력집중의 선형전장보다 효과집중의 ‘비선형’전장, 밀집·대량파괴의 전장보다 분산·정밀파괴의 전장이 강조되고, 시간요소(템포, 속도, 동시성, 동기화 등)와 인간요소(신체적, 심리적)에 대한 충격·마비효과가 중시되는 전장이 될 것이다.

2. 네트워크 중심전(NCW)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전의 플랫폼중심(platform-centric)의 전투는 네트워크중심(network-centric)의 전투로 변화하고 있다. 미 육군은 최초로 디지털 사단을 건설하면서 처음에는 ‘전투의 디지털화(digitized warfare)’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네트워크중심의 전투(network-centric warfare)’로 대체하였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전쟁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고

40) 국방부(2003),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 방책』, 국방부, pp.67-70.

도의 지식·정보능력을 바탕으로 자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지휘통제체로 분산된 전력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전력을 보장하는 전투개념이다.⁴¹⁾

네트워크중심의 전투는 무기나 플랫폼을 개별단위로 사용하기보다 다수의 전투체계가 동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조직됨으로써 전투력 발휘 효과를 크게 증대시키는 새로운 방법이다. 미래 전장에서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전투력을 집중하고 기동의 우세를 달성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문제는 다량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로 전환하여 전장상황 인식을 높이는 데에 있다. 전투원의 경험과 훈련에 입각해서 얻은 정제된 전장상황 인식은 전장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고 이는 다시 전장의 지배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은 다음 3가지 장점을 강조한다.

첫째, 지리적으로 널리 분산 배치된 전력요소(부대)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통신, 이동, 투사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한 곳에 집결, 또는 상호 근접된 거리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각 전력요소(부대)는 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적에게 신속하게 집중공격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NCW에서는 모든 전력요소(부대)들은 지리적 구속에서 해방 될 수 있다. 전력요소(부대)들이 전장공간 내 어느 곳에 위치되던지 간에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효과중심의 집중공격에 참가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중심전의 군대는 ‘지식’의 능력 및 수준이 매우 높다. 전장상황(피·아, 환경)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모든 전투원들이 공통으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하위체대부터 상향식으로(bottom up) 지휘관의 의도를 신속히 이해하고 자동적으로 자체동기화 하여 작전템포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하고 적은 전력(부대)으로 큰 전투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가지 전쟁원칙(지시), 정밀한 교전법칙 등이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41) 조영갑(2009), 전계서, p.386.

셋째, 전장의 분산 배치된 전력요소들이 상황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속도지휘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보이드(Boyd)의 OODA를 신속히 회전시켜 매우 빠른 템포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지휘관은 신속한 지휘결심을 할 수 있고, 의도중심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적인 전투지휘가 가능하다. 그리고 장병들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전체와 조화 있게 자발적으로 동조, 통합하게 된다.

3. 정보전 · 사이버전

1) 정보전의 개념

정보전, 사이버전 또는 정보작전은 한 마디로 앞의 네트워크 중심전을 손상 · 방해 · 무실화 시키는 반-네트워크중심전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정보전(IO : Information Operation)과 관련하여 정의 및 개념을 살펴본다. IO와 IW의 관계는 미군 내부에서도 혼란이 적지 않았다. 한때는 IW가 IO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논의 되었다. 본 연구는 미 합참이 1998년 이러한 혼돈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리로 정식화한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의하면 IO가 IW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써, 정보작전(IO)이란 정보우위(IS)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 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합하여 아측의 정보와 정보체계(지휘통제체계,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등)는 안전하게 방어 · 보호하고, 상대측의 정보와 정보체계에 공격을 가하거나 영향을 주는 군사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정보전(IW)은 ‘특정한 적에 대해서 특정목표를 달성 및 진척시키기 위해서 위기시나 분쟁시에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정보작전’으로 정의한 것이다. 미 합참은 시기 면에서 정보작전은 전시와 평시를 모두 포함하지만, 정보전은 위기 및 분쟁시에 실시하는 정보작전으로 정리하고, 범위 면에서는 정보작전이 비 군사 분야(경제, 사회 등)도 포괄하지만 정보전은 군사 분야 및 특정목표에 한정, 정보전을 정보작전의 하위개념으로 명확히 정립하였다.⁴²⁾

이와 같이, 정보전(IW)이 정보작전(IO)의 한 부분으로 위치하게 된 것은

42) 배달형(2000), 『정보작전의 이해』, 한국국방연구원, p.62.

미래의 정보전 양상이 군사차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선진국가일수록 정보·지식사회가 되고, 국가의 기간시스템(금융체계, 물류유통체계, 철도운영체계, 지하철체계, 항공관제체계, 에너지 파이프라인, 미디어 체계 등)이 모두 고도수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 통제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들은 와든(Warden)의 「5원론」⁴³⁾의 II원에 해당되는 국가의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이들이 공격을 받아서 기능이 장애, 저하, 손상, 마비되면 국가의 전체기능이 정지 또는 마비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군사작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군은 정보작전 요소를 물리적 파괴, 전자적,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 심리전, 기만작전, 작전보안, 대정보로 정립하고, 공보작전(PA : Public Affair)과 민군작전(CMO : Civil Military Operations)을 관련활동으로 포함시켰으며 정보작전(IO)을 공세적 작전(IO-Offense)과 방어 작전(IO-Defense)으로 구분하였다.

공세적 정보작전은 적의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쳐서 효과적 지휘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 리더쉽의 인간 심리적 요소와 의사결정과정을 주 공격 대상으로 하여 적의 기능 파괴, 능력 저하, 거부, 오도, 혼돈, 좌절 등을 야기하는 활동을 한다. 방어적 정보작전은 아측이 정보에 적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면서 적이 아측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정보작전은 정보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관련요소들 (IO-O/D, PA, CA)을 모두 상호 연계·통합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작전은 모든 수준의 전쟁(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사회와 군대의 정보화·지식화가 고도로 발전될수록 정보작전의 전략적 유용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2) 사이버전의 개념

사이버전(Cyber Warfare)은 21세기 정보·지식 사회에서 가장 특징 있

43) John.A.Warden, 전미 공군 대령으로 5원론(Five Ring theory)개발하였다. 제 1원은 지휘부(국가핵심중추조직), 제 2원은 핵심체계(전기, 석유, 식량 등 동력 에너지 체계와 화폐, 금융체계), 제 3원은 하부구조(도로, 공항, 공장 등 기반시설로서 국가 시스템 작동 기능 수행), 제 4원은 시민(전투원을 제외한 일반 국민 체계), 제 5원은 군대(전투조직 및 전투력)를 말함.

는 새로운 전쟁양상이다. 사이버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는 전자적 가상 현실세계(사이버공간)에서 상대측의 정보 및 자산을 교란, 거부, 통제, 파괴, 마비시키고 적의 이와 같은 행위로부터 아측을 방어·보호하는 모든 행동, 즉 사이버 공간을 통제·지배하기 위한 무형의 공·방전이다.’라고 정의 될 수 있다.

최근 미 합참은 사이버전을 정보작전과 밀접히 연계시켰다. 즉 정보작전에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CNO)을 포함시킨 것이다. 미 합참교리에 의하면, CNO는 “컴퓨터 및 컴퓨터 네트워크와 컴퓨터 및 네트워크 속에 내장된 정보를 공격하거나(CNO) 방어하는(CND) 작전이다.”라고 정의 되었는데, 이는 사이버전의 정의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다만 사이버전이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보다 대상 범위가 넓고(비 군사 영역 포함), CNO는 그 적용시기가 분쟁·전쟁시로 제한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서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웜, 논리폭탄, 치핑 등이 계속 개발·활용 될 것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백신, 침입차단, 암호 및 인증, 보안관제, 컴퓨터 긴급조치팀(CERT) 등의 방책이 경쟁적으로 발전·활용 될 것이다.⁴⁴⁾

사이버전은 매우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이버전 무기 기술은 소수의 숙련된 개인이나 집단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비용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전은 저비용의 초보적인 공격기술로도 핵무기 못지않은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셋째, 사이버전은 지구촌 어디든지 적용가능하다. 세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정보공동체(one click society)이므로 사이버전의 공간은 지구촌 어디든지 미칠 수 있다. 넷째, 사이버전은 전·평시 구분 없이 군사, 정치, 사회, 경제, 심리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다섯째, 사이버전은 누가 공격을 했는지를 알 수 없다. 선제공격이 용이하고, 정보의 유출, 왜곡, 파괴가 가능하다. 여섯째, 사이버 공격 무기는 상대측의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장비 및 시설을 외형적으로

44) 사이버 공격 무기는 소프트 공격무기(soft attack)와 물리적 파괴무기(physical destruction)로 구분된다. 소프트 공격무기에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웜, 폭탄메일, 논리폭탄, 자동이동순항무기(AMCW)등이 있고, 물리적 파괴무기에는 치핑(Chipping), 제밍(Jamming), 미생물무기, 나노머신, 고출력 전자총(HERP),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 전자기폭탄(HMP)등이 있다.

파괴함이 없이 산대 국가, 조직, 군대의 기능을 무능화 시킬 수 있다. 일곱째, 사이버전은 지금까지의 전쟁과 비교해볼 때 조직, 인력, 자금 등의 방대한 지원이 필요치 않다.

힘이 약한 국가 또는 집단(국제범죄 카르텔, 테러리스트)이 강대한 국가에 비대칭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4. 효과중심 정밀 타격전

효과중심작전이란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 아군의 군사적 역량과 비군사적 역량을 모두 활용한 정보작전, 입도적인 기동, 정밀공격으로 적의 전쟁수단이나 의지를 단순히 파괴하기보다는 핵심적 기능마비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다.⁴⁵⁾ 과거에는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적의 의지를 강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사정 정밀유도무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적의 군사력을 대량으로 ‘파괴’하지 않고서도 적의 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통제’란 전략적 요소들에 대한 적의 영향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적의 일부 긴요 핵심시스템의 무력화로 국가의 전체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시스템의 한정된 부분에 특정한 효과를 달성하여 그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효과중심작전(EBO)은 ①피·아에 대한 포괄적 통찰력 개발(지식) → ②전략과 임무를 상호 연계한 효과 기획(효과) → ③모든 가용한 군사력을 고려한 효과기획의 실제 적용(시행) → ④적용결과의 평가(평가) → ⑤작전행위의 수정·보완(수정)의 사이클을 형성하고, 이러한 사이클을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시킴으로써 군사적 목표를 큰 희생 없이 조기에 달성하도록 한다. EBO 사이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가 바로 효과기획이다. 효과기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 효과를 얻으려면 연관된 원인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대 및 미래에는 전쟁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된다. 네트워크체계의 혁신

45) 조영갑(2009) 전계서, p.382.

으로 즉응성이 과거 수주, 수개월에서 수 시간 내로 대폭 향상되고, 사거리의 대폭 증대로 적지중심 투사가 가능하며, 정확도의 획기적인 향상으로 요망 효과만을 성취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병력과 장비, 그리고 군수지원은 오히려 대폭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싸우는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다. ‘파괴’중심에서 ‘효과’중심으로, 영토의 ‘점령’에서 시스템의 ‘통제’로, 군사력의 ‘현시’에서 군사적‘영향력’의 과시로, 개별 순차적 공격에서 동시병렬공격으로, 투입(input)중심에서 산출(output)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과거 섬멸전·소모전에서는 적의 표적들을 개별·순차적으로 파괴하였다. 군사력의 크기가 전장/작전의 승패를 좌우한 ‘투입’(input)중심의 전장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대 및 미래전에서는 적의 표적들을 ‘효과’에 기초해서 핵심 진요 표적들만 선별적으로 동시·병력적으로 파괴한다. 적의 시스템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 되는 ‘산출’(output)중심의 전장운영 방식을 추구한다.

5. 마비중심의 신속기동전

기동전은 신속하고 대담한 기동으로 위치적 우세를 조성, 확보하여,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연계성 및 응집력을 와해시켜, 정신적으로 혼절·마비효과를 창출하는 전쟁개념이다. 또한 신속 결정적 기동작전이란 적의 방어가 없는 곳이나 적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방향으로 신속한 기동을 실시하여 작전의 조건과 속도를 강요하고, 수개의 방향 또는 다차원의 비대칭공격으로 결정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⁴⁶⁾ 기동전은 소모전, 화력전, 진지전, 지구전 등에 대비 또는 대칭되는 전쟁개념이다. 소모전은 산업시대의 전쟁방식으로서 ‘적을 일련의 파괴 되어져야할 표적들’로 정의하고 있다. 어떤 술책이나 지략이 없이 적의 ‘물질적인 힘’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기동전은 적 시스템의 핵

46) 조영갑(2009), 전계서, p.377.

심을 파괴·제거시킴으로써 적의 전체 시스템을 마비·무력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적의 표적은 적의 전투수단, 전투방법, 기획 및 계획 등의 연결성과 응집성이다. 매우적은 표적들을 선별적으로 파괴, 제거함으로써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확대·확산되는 후속효과를 창출한다. 기동전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볼 때, 투입된 노력과 비용은 적인데 산출효과와 성과는 매우 큰 전쟁개념인 것이다. 기동전은 전장의 본래 특성인 안개, 마찰, 우연, 불확실성, 모호성, 유동성 등으로 인한 ‘무질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 측에게는 유리하게 하고, 적에게는 불리하도록 만든다. 즉, 기동전을 통해 적은 무질서 속에 빠지고, 아 측은 질서를 유지하여 적은 투입비용으로 단기간 내에 승리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기동전에는 3대 원칙이 있다. 첫째, 적의 중심(COGs)을 식별, 표적화 한다. 여기서 적의 중심이라 함은 적의 힘의 원천 또는 힘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으로서, 적의 중심을 성공적으로 방해·파괴·제거하면 적의 사기, 조직, 작전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적의 중심은 모든 전쟁수준에 존재하지만 기동전에서는 전략적 수준의 중심에 특별히 초점을 둔다.

둘째, 아 측에 유리한 전투여건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여기서 전투여건이라 함은 교전의 시간과 장소, 공간, 강도 및 유형을 망라한 개념으로서 아 측이 전쟁을 유리한 조건하에서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적의 힘에 내재되어있는 ‘틈새(취약점)’를 발견하여 최대한 이용한다. 이는 전쟁 및 전투수행과정에서 적의 취약점에 대해 아군의 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조정·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전투여건의 설정은 이러한 틈새의 발견 및 이용을 촉진시키고, 적이 아 측에 대해 틈새를 발견 및 활용하는 것을 제한 내지 거부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시 구데리안의 ‘기계화 전격전’ (전차, 항공기, 무전기 등) 방식에서 탈피, ‘정보화 전격전’ (디지털, 네트워크, PGMs 등)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계화 전격전은 오직 중심

깊은 빠른 ‘기동’에 의해서만 적에게 충격·마비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으나, 정보화 전격전에서는 중심 기동뿐만 아니라 중심 정밀타격과 정보전 무기에 의해서도 충격·마비효과를 매우 위력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정보화 기동전’은 정보우세 하에서 중심 정밀타격전과 정보·사이버전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합됨으로써 기동의 속도성과 중심성, 기습성 및 충격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며, 그 결과 마비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다.

6. 비선형전

과거에는 적의 중심을 공격하려면 먼저 와든(Warden)의 동심 5원론의 제 5원인 적의 전방 배치 군사력을 파괴해야 했다. 적의 전방군사력을 파괴하고 적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으면 5원론의 제 1원인 적의 핵심중심부에 접근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동에 의한 병력과 화력의 집중, 그리고 이에 의한 손실률과 전진율 및 영토점령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장사정 정밀무기와 사이버전 무기에 의해서도 적의 핵심중심들(COGs)을 효과중심으로 동시 병렬공격 함으로써 큰 인명희생과 대량파괴 없이 조기에 적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는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점적·집중·선형전(Linear Warfare)이 비 점적·분산·비선형전(Non linear Warfare)으로 변화된다.⁴⁷⁾

선형전에서는 중심-전방-후방, 전선, 전투지경선, 화력통제선 등과 같은 인위적인 전투구획이 2차원 지도 위에 설정되고, 이에 의해 전투부대 간, 전투지원부대간의 협조대형을 형성해서 적과 교전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신 게릴라식’ 전투방식이라 볼 수 있다.⁴⁸⁾ 사방360도가 적에게 노출되어 있고, 다면·다점·다방향·다차원의 전장에 놓여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 부대들은 소규모로 넓은 전장에 분산되어 있지만, 네트워크로 밀접히 연결되어 전장가시화 및 정보공유화가 가능하고, 매우 민첩한 기동력으로 매우 빠른

47) 조영갑(2009), 전계서, p.372 재정리.

48) 권태영·정춘일(1998), 『선진국방의 지평』, 서울 : 을지서적, pp.253-254.

템포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해·공이 긴밀하게 합동하고 제 병과 밀접하게 협동하여 시스템차원에서 효과중심의 정밀중심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래 전장에서는 아군 부대들은 생존을 위해 소규모로 분산, 비선형적으로 운영되다가, 필요시 적에게 다점·다정면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공격 후에는 다시 분산 운영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불연속·비선형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보우위, 네트워크화, 중심정밀타격, 압도적기동 등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선형전은 이미 네트워크 중심전, 효과중심 정밀타격전, 신속기동전 등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7. 비살상전

우선 비살상전과 연관된 용어를 정의하고 그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육군교리에 의하면 ‘비살상(Non-Lethal)’이라 함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치명 또는 영구 부상시키지 않고, 불필요하게 물자를 파괴하거나 환경에 선상을 주지 않으면서, 적의 표적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었다.

비살상무기(NLW)는 앞에서 정의된 ‘비살상’을 목표로 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무기로서, 사람의 치명적 손상과 자산 및 환경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들의 실제 기능을 무능화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되고 그 목적에 주로 활용되는 무기들이다. 여기서 유의 할 점은 비살상이라고 해서 사람의 치명적 손상 또는 영구적 부상이 발생할 확률이 ‘영(零)’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 살상무기보다는 치명적 손상 또는 영구적 부상의 발생확률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이다.

비살상무기는 여러 수준의 전쟁 및 전투 양상에 활용될 수 있다. 비살상 무기는 폭동진압, 군중통제, 국제범죄, 테러범색출 및 체포, 인질구출, 평화 조성 및 유지, 인도적 지원, 무력시위, 지원차단 및 제재, 접근거부 및 통제,

도시작전(시가지전), 소규모 국지·제한작전, 대규모작전 등 저·중·고강도 분쟁과 전술적·작전적·전략적 수준의 모든 분쟁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될 무기의 종류 및 유형과 운영방법은 그 당시상황의 METT-TC에 따라 다를 것이다.

비살상무기는 지휘관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즉, 전통적인 살상무기가 더 이상 유익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작전환경에서 매우 유용한 돌파구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비살상무기가 첨단기술에 의해 아무리 비약적으로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인명의 비살상과 자산의 비파괴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면 아군의 임무성취와 부대안전에 상당히 큰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아 측의 임무 성취와 부대보호, 그리고 적의 민간 인명 및 자산 안전이란 3개 요소간의상쇄분석(trade-off analysis)을 통하여 ‘비전투원 안전’의 최적수준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⁴⁹⁾

8. 무인로봇전

21세기 정보·지식사회의 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로봇이 전투원을 대신하여 정보수집, 표적식별 및 추적, 레이더 교란, 불발탄 제거, 지뢰 및 기뢰 제거, 화생방 오염제독 등을 수행함은 물론, 적의 표적을 공격 파괴하는 전투임무까지도 담당하는 전쟁양상이 포출 될 것이다. 로봇체계가 전투원의 전통적인 3D작업을 대행하고, 전투의 경제성, 생산성, 효율성, 능률성을 증진시키며, 인간중시의 전투수행을 가능 하도록 하고, 군의 직업적 위상 및 매력을 제고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무인체계는 1970년대 이전에는 기술적 성과와 실전 운영성의 의문이 적지 않아 본격화되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이 1973년 욥키프로(Yome Kippur) 전쟁에서 시리아의 방공포를 기만하고, 1982년 베카 계곡에서 방공망을 제압(SEAD)하는데 무인비행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

49) R. Steele, "Joint Concept for Non-Lethal Weapons"(www.fas.org/man/dod-101/sys/land/docs/nonleth.htm).

등 선진 군사강국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21세기형 군사혁신과 군 변혁을 추구하면서 목표군사력(Objective Force)에 무인체계의 수요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일부 개발된 무인체계는 최근 전쟁에서 그 유용성을 실험, 확인하였다.

현재 미국은 무인전투체계(UCAV)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럼스펠드(Rumsfeld) 국방장관은 로봇무기의 혁신적 발전을 계속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각 군은 무인체계를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⁵⁰⁾

9. 비대칭전

비대칭전의 기본 사상 및 원리는 2500년 전 손자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손자는 전쟁의 기본은 상대를 기만하는 것으로서, 적과 정공법으로 대치하고 기공법에 의해 승리를 취하며, 적의충실한 곳은 피하고 허약한 점을 공격하여야 한다고 비대칭전의 진수를 설파했다.⁵¹⁾ 그는 아 측이 상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전술을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자기 변경하면 ‘기습효과’를 창출하고, 전략적 가치가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20세기 중엽, 영국의 리텔 하트(Liddell Heart)도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이용하는 ‘간접접근전략’을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의 전략가들(Creveld, Boyd, Metz 등)이 9.11 테러참사의 충격 속에 테러와의 전쟁을 체험하면서 ‘비대칭전’의 개념을 새로이 재조명하게 되었다.

미 합참이 ‘비대칭성’을 공식문서에 제기한 것은 1999년에 발간된 합동전략 검토서(JSR)가 처음이었다. JSR에 의하면, “비대칭 접근이란 적이 미국과 상당히 다른 적전방식을 사용하여 미국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미국의 강점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로서, 상대측의 주도권, 행동의 자유 및 의지에 충격 또는 혼돈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데 주안을 둔다. 비대칭적 접근을

50) 특히, 전자기술,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 기술, 인간-기계 상호성 기술, 합성재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다양한 상용·공업용 로봇이 출현되고 있음.

51) 조규필 외(2003), “미래지상전 교리 발전 방안”, 『2003년 육군전투발전』, kris, pp.215-220 재정리.

하려면 상대측의 취약점을 잘 평가해야 하고, 혁신적이고 비전통적인 전술, 무기, 기술 등을 사용해야 한다. 비대칭적 접근은 모든 전쟁 수준(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에서 적용가능하고, 모든 유형의 군사작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논의된 비대칭전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교범(교육회장 03-3-18 지상작전)에 의하면, “비대칭전은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상대방과 다른 성격 및 기능을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는 작전이며 부동성과 우월성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부동성이라 함은 적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개발하지 못한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적의 취약분야를 공격하거나 적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며, 우월성은 적보다 양적·질적 측면에서 압도하는 능력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되었다.

한편, 합참군사용어사전에서는, “비대칭전은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다른 수단, 방법, 차원으로 싸우는 전쟁양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아군보다 우세한 적과 전투를 할 경우에는 기술위주작전이 아닌 방식으로 싸우고, 반대로 기술적으로 아군보다 열세한 적과 전투를 할 경우에는 기술위주의 전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했다.⁵²⁾ 이들은 주변국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우세하고 북한은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열세한 점을 고려해서 비대칭전을 발전시켜야 됨을 주장하였다. ⁵³⁾

비대칭전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 적용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비대칭성, 비대칭 위협, 비대칭 접근, 비대칭전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대칭전에 대한 분석에서 과거의 전례를 들고 있는데, 여기는 영국의 ‘장궁’, 나폴레옹의 ‘시민군’, 이순신의 ‘거북선’ 과 ‘학익전법’, 구데리안(Guderian)의 ‘전격전 및 판저부대’, 독일의 v-1 및 v-2, 일본의 ‘가미가제’, 모택동의 ‘인해전술’, 지압(Giap)의 ‘게릴라전’, NATO의 ‘질적

52) 합동참고교범 10-2(2004. 1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53) 이상학(2003), “육군의 미래작전 수행개념 연구”, 『2003년 육군전투발전』, kris, pp125 -126 재정리.

군대’, 최근 미국의 ‘신속결정작전 및 효과중심작전’, ‘9.11 테러리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비대칭전이 이러한 사례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면 비대칭전을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해서 정의할 수 없고, 만일 그렇게 할 경우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만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대칭전을 좀 더 일반화하여 정의하면, “비대칭전은 전쟁에서 피·아간의 ‘차이점’ (강, 약점)을 이용해서 아 측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하고 적에게는 최대한 불리하도록 하여 승리를 도모하는 지략적 전쟁 수행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차이점의 대상 분야는 유행적 영역(양과 질, 체계, 기술, 부대 등)과 무형적 영역(가치, 리더십, 전략, 교리, 전술, 훈련, 사기, 응집력 등)을 망라한다. 그리고 핵심 논리는 차이점 분석을 통해서 아 측의 강·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 측의 강점 최대화·약점 최소화 정책과 적의 강점 최소화·약점 최대화 정책을 도출하여 모험과 승부수를 걸고 대담하게 실천하는데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고 및 행위는 모든 군대가 전쟁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전이 부각되는 것은 열세의 작은 힘으로 우세한 큰 힘의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소제대(以小制大)’의 특단의 전략이 요구되고 이러한 전략에서는 적의 물리적 파괴보다 적의 심리적 충격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대칭전에서는 우세한 힘이 열세한 힘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관념을 거부한다. 열세한 힘도 적의 허점, 틈새를 잘 이용하면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자는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하여 심리적 자만심이 생기고 이로 인해 비대칭적 묘수를 찾는데 태만하게 된다. 반면에 약자는 강한 상대에게 지면 파멸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위기감에서 비범한 비대칭적 묘수를 발견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10. 동시통합전

동시통합전은 ‘동시성’과 ‘통합성’의 특성이 합성된 전쟁양상이다.

따라서 이 두 용어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동시성은 전장에서 제반 군사 행위들이 일련의 시간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행위가 시간적으로 압축되어 거의 일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광역·분산 전장에서 제반 군사행위가 동시 또는 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전장의 모든 참여 주체(장병, 플랫폼, 부대, 시설 등)들이 네트워크로 밀접히 연결되어 정보 우세 하에서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장의 가시화로 적의 핵심적 중심(COGs)을 식별해서 효과위주로 가용한 수단 및 노력을 동시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감시-통제-타격 복합체에 의한 네트워크 중심전(NCW)의 수행으로 OODA Loop를 신속히 회전함으로써 자체 동기화(Self-Synchronization)와 속도지휘(Speed of Command), 그리고 빠른 템포의 작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통합성’은 군사목적을 결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한 전투 공간, 전투수단 및 노력, 전투수행방식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을 의미한다. 미래 전장에서 ‘결정성’과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모든 가용한 능력 및 방책이 특정 목표달성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감시-통제-타격 복합체(SoS) 및 네트워크 중심전(NCW)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미래전의 체계 및 전쟁수행 개념이 모두 상호 연계된 가운데 상황 적응적으로 동시 통합되어 운영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합성하여 동시통합전을 정의하면, 동시통합전은 디지털 네트워크 전장에서 군사목표를 신속히 효과위주로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전장공간과 수단 및 방책을 동시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전쟁방식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디지털 네트워크 전장이라 함은 넓은 작전지역에 분산 위치한 제 전력요소들이 시스템 복합체계의 개념에서 네트워크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정보우위하에 정보를 공유한 상태를 뜻하고, 군사목표의 신속한 효과위주 달성이라 함은 적의 전략적·작전적 중심(COGs)에 가용한 모든 자산 및 노력을 동시적으로 집중해야 됨을 의미한다.

제 2 절 한국의 군사전략

1. 군사목표

한국군의 군사목표는 국방목표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국의 국방목표는 국방백서에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⁵⁴⁾ 따라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은 북한의 현실적인 군사위협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안정과 평화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주변국과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내는 것이며, 나아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유지 노력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군사전략은 국가목표 및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이 지향해야 할 행동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 또는 자원을 제시한다. 리델하트는 군사목표가 정치목표의 수단이므로 정치목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군사목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정책목표로 대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체적인 한국의 군사전략이 비밀에 해당하므로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2. 군사전략개념

1) 안보정책

한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4강의 강대국인 중·미간 경쟁관

54) 국방부(2008),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p.34.

계를 고려하여 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가가고 있다. 중국과의 안보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먼저 선행되어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중반까지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극화가 진행되는 '일초다강'의 질서가 전개될 것이며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다원화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중국과 정치·군사적 신뢰를 확대함으로써 대북 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미간 갈등이 부각 될수록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중·미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 수행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고 있다.

2) 군사전략 기조

한국군은 국방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5대 기조에 따라 국방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첫째,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하여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에는 전승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둘째, 선진 정예국방 건설은 통일 이후 세계적인 군사강대국인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환경 역학속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기조이다. 셋째,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평화통일 과정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한·미동맹 관계는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은 한·미동맹관계를 기본 틀로 하여 다각적·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다자안보협력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 지역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협력기구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21세기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및 비군사 분야를 망라한 제반 안보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안보체제'의 구축이 불가피하며, '국민의 군대'육성은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3) 군사전략

한국군의 군사전략개념은 북한군사위협의 상존에 따른 한·미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한 억제전략 및 방어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과 불안정상태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확고한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군사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평시에는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운용하여 북한군의 활동을 24시간 감시하여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태세를 확립하는 등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한·미 간에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하며, 조기에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군사 작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전시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사정거리 1,500Km 수준의 미사일과 다량의 화학무기, 포병 및 기계화 부대 등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개전 초기의 전투결과는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사전 분쇄하고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 통수 및 국방위기 대응체제를 공고히 유지한 가운데 각종 협의체의 활성화와 계획 발전, 연합 연습 및 합동 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방호하기 위해 미사일 및 화생전 위협에 대비한 종합대비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화생방 정책부서 및 화학부대 편성 보강과 화생방 방호장비 및 물자의 증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3. 군사자원

한국군의 지휘체계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로써 실질적 운영주체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이다. 따라서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미 연합사의 창설로 6.25전쟁 당시부터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으나, 1994년 12월 1일부로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 부대에 행사했던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됨에 따라, 평시에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CODA)에 대해서만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유지는 종전대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하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와 연합군사령부는 상호지원 및 협조 관계 하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에 따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육군은 육군본부와 3개 군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 사령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00개 군단, 00개 사단, 00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군과 3군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수도권을 포함하는 책임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군은 1·3군 책임지역 이후부터 해안선을 포함한 후방지역 전체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수전 사령부는 여러 개의 특전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첩보수집과 우리군의 화력유도 및 기타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해군본부, 작전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작전사령부 예하에는 동·서·남해의 3개 함대사령부가 편성되어 있으며, 각 함대사령부는 책임해역 방어를 위하여 구축함, 호위함, 초계전투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작전사령부는 대잠전, 기뢰전, 상륙전, 특수전 등 주요 성분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함정 및 항공기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병대사령부는 예하에 0개 사단 및 0개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군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및 이를 지원하는 사령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평시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적 도발시 응징보복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시에는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적이 공중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적의 주요 전력과 잠재 전력을 파괴하여 전쟁수행 의지를 무력화시키며, 지상군 및 해군 작전을 지원한다. 주요전력으로 약 6만 3천여 명의 병력과 F-15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8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2년대까지 AWACS 4대, 500억원 규모의 공대함 하프 미사일, 4400억원의 중고도 무인정찰기(UAV)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예비군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각

자의 임무수행 능력을 유지하여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대 증·창설 및 병력손실에 대한 보충요원으로 서 현역과 똑같이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 3 절 한국과 주변국의 군사전략 분석결과

현 우리의 군사전략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국과의 위협을 분쟁위협 수준의 저강도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현재 까지 남·북한이 대치상태 하에서 우리는 주로 북한 침략에 대비한 전면전 위주의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군사력 건설에 치중해왔다. 주변국을 포함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전략을 발전시킨 것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 하였으나 주 관점은 북한의 기습침략에 대비한 군사전략이었다. 이러다 보니 자연 주변국의 위협은 매우 약하게 보고 있으며, 위협이 있더라도 분쟁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분쟁정도의 위협으로만 한정 될 것이나 이다. 앞에서 국제 및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향상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바, 이들 국가와 통일이한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분쟁 시에도 전면전을 불사할 수 있는 군사전략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유리한 위치에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고, 만약 확전 시에도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배경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은 주변국과의 전면전까지도 고려한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북한위협 대비 위주의 군 구조에 고착되어 있다. 당면 위협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지만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시기에는 주변국의 위협이 최우선적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에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지휘·부대구조 하에서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즉 주변국 위협에 대한 일반적인 전략개념은 언급하고 있지

만 이에 대비한 군 구조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이 없다. 세계 각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군사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군사력을 건설한다면 먼저 남·북한 통일 이후의 군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이와 병행해서 군사력을 건설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상군 위주의 군사전략 개념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지상군 전력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개념도 지상군 위주의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지·해·공 전력이 통합되어 효과적인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개념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세계 각국은 장차전의 양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군사혁신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이 발전시킨 개념을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 항상 뒤떨어진 전략개념 하 군사력을 건설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지상군의 개념 우선시에서 탈피하여 해·공 전력도 병행 발전시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군사전략 개념 발전이 미흡하다. 우리 군은 과거 6·25전쟁에서 겪었던 경험을 비추어 이를 보완하는 개념 하에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이제는 먼 미래를 잘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잘못된 군사전략개념 하 건설된 군사력은 새로이 변경 시에는 그동안 투자했던 국방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우리의 현 군사전략을 문제점을 보완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시기의 군사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잠재적인 위협국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는 국가안보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 5 장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구상

군사전략은 국가목표, 국가안보목표 및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안보위협요인을 도출하여 군사적 대응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군사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전략개념을 발전시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연도에 따른 군사력 건설 소요를 도출하여 국방정책에 반영하면 국방부는 예산과 연계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건설된 군사력은 해당부대에 할당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년 반복한다. 앞에서 국제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주변국의 군사력 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장차 한반도에서의 통일한국에 위협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에너지 자원 관련 분쟁 등이 예상되며, 이러한 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또한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도 상존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군사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군사전략개념을 수립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방향을 제시하여 군사력을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군 군사전략 기본방향은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실체화 되지 않도록 억제력을 위한 충분한 억제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억제 실패 시에는 원상회복과 확전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확전 시에는 반드시 승리하여 국가이익을 수호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관심대상인 테러, 마약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 1 절 군사전략 목표

통일후의 군사전략은 당시의 전략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통일한국은 주변국가와 새로운 군사관계를 정립한다는 개념에 입각하여 전략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한반도의 국토가 협소하고 중심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한반도 외부에서 전쟁을 수행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⁵⁵⁾

먼저 국가목표, 국가안보목표, 국방목표에 부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전략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남·북한 통일 이후의 국가목표, 국가안보목표, 국방목표는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안전보장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해서 군사전략목표를 설정하면 된다.

다음은 전략환경평가 결과 도출된 위협을 예측하고 대처측면에서 고찰하면 군사적 위협으로는 남·북한이 통일이후에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며, 위협양상은 영토 및 에너지자원 분쟁이 발생하고, 또는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확산 시에는 전면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군사전략은 이러한 주변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전략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아진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가 설정하여야 한다.

통일후의 군사전략은 주변 강대국과 일대일로 맞서는 공세전략은 부적합하며, 그렇다고 방어위주의 수세전략으로는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은 대체로 일반화된 ‘공세적 방어전략’의 개념 위에서 수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⁵⁶⁾ 기본적인 군사전략 목표는 방어에 두되 군사행동 자체는 공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평 시

억제개념을 발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바, 특히 거부적인 억제에 중점을 두어 상대방의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by Denial)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⁵⁷⁾ 왜냐면 제재적 억제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55) 하정열(2004), 『한반도의 평화통일 전략』, 서울 : 박영사, p.403.

56) 위의 책 (상계서), p.402.

57) 위의 책 (상계서), p.402

서는 핵과 같은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국가는 한반도에서 비핵화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만약 보유하게 된다면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이 심화되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재적 억제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억제를 하는데 있어 거부적 억제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 본다.

이를 기초로 목표를 설정하면 ‘평시 주변국가와의 분쟁과 전쟁을 거부적 방위력을 기초로 억제함으로써 예방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2. 분쟁시

억제 실패시는 적의 군사적 의도를 거부하여야 한다. 즉 가용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적의 군사적 도발을 격퇴하여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면서 유리한 상황에서 분쟁을 종결시켜 우리 국가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지·제한전 형태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적의 군사적 도발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되 상응하는 응정보복을 실시하여 국가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목표를 설정하면 ‘억제실패 시에는 강력한 응정보복능력으로 적의 도발을 격퇴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원상회복에 담긴 의미는 확전을 방지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⁵⁸⁾

3. 전면전시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생존에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이 경우 국가의 총역량이 결집된 총력방위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전면전시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세적인 방위를 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목표를 설정하면 ‘전면전으로 확대 시에는 공세적인 방위로 승리하여 국토를 수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58) 장영호(2008),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p.87.

4. 기타 : 비군사적 위협에 효과적 대응

기타 비군사적 위협은 위협양상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어떠한 위협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그리고 위협 자체가 국가를 초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국가의 힘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제적으로 관련 국가들과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테러에 대해 사전적 예방활동과 사후적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인간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기본권과 스스로 보호대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⁵⁹⁾ 이를 기초로 목표를 설정하면 ‘비군사적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제 2 절 군사전략 개념

군사전략 개념은 설정된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안으로써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략환경평가 결과 도출된 위협에 대응하고, 설정된 군사전략목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수립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통일한국군의 위협대응 기본방향은 주변국가의 군사적 위협과 국제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을 대상으로 군사전략목표를平時, 분쟁시, 전쟁으로 확전 시,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 시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므로 설정된 군사전략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군사전략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1. ‘平時 주변국가와의 분쟁과 전쟁을 거부적 방위력을 기초로 억제함으로써 예방한다.’

59) 조영갑(2009), 전계서, p.490.

과거 임진왜란 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이이 선생은 십만 양병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전쟁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면서 상대방에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주변국의 군사적 도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로, 먼저 자주적인 군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는 한·미동맹관계를 기본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있지만 남·북한 통일이 된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동맹체제가 보장되리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전략적 유연성’을 기초로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 (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의거 세계 전 지역에 전력을 투사하는 개념으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을 추진 중이므로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 전력도 언제라도 철수하여 타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충분한 군사능력 보유는 분쟁과 전쟁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이를 위한 전력으로는 주변국의 군사적 도발을 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 능력과 전략적·전술적 타격능력 그리고 네트워크에 의한 지휘·통제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로, 국제적으로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보다는 여러 국가와 공조하여 위협을 대처하는 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한 적대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상호 군사적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군사외교활동은 충분한 억제능력을 보유하는 것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한·미 군사 동맹체제를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계속 발전,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한국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평시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주변국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핵무기 개발능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단기간에 이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억제 실패 시에는 강력한 응징보복능력으로 적의 도발을 격퇴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한다.’

만약 국지분쟁이 발생 시에는 조기에 군사력을 투입하여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단기간 내 적을 제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로, 신속대응군에 의한 조기진압을 한다. 현재는 주로 북한 침략에 대해 방위하는 개념이므로 적이 분명한 상황이지만 남·북한 통일이후에는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 서쪽은 중국, 동남쪽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위협을 총체적으로 대비해야하는 불명확한 전장상황이 지속되리라 본다. 따라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신속 대응군이 필요하며,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대응군에 의해 조기진압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강력한 중앙 즉응군을 운용한다. 통일한국의 위협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의한 위협으로 양분되므로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력을 유지하여 운용한다. 즉 한·중 국경선 일대는 주로 지상군 체제로, 한·일 국경선 일대는 주로 해군체제로 대비하여, 적이 군사적 도발 시에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력을 적극 운용하면서 중앙에 전략적 즉응군을 편성하여 도발지역에 증강하여 대응하는 전략적 투입 단계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전력으로는 신속한 지상·해상·공중 기동능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셋째로, 강력한 응징보복능력을 사용한다. 적의 군사적 도발은 1회성이 아닌 차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적의 의지를 초기에 제압함으로써 유리한 상황 하에서 분쟁을 종결토록 하여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 응징보복 수단은 전략적 미사일 등이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3. ‘전면전으로 확전 시에는 공세적인 방위로 승리하여 국토를 수호한다.’

만약 전면전으로 확전 시는 국가총력전 개념 하 적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주면서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여건 하에서 전쟁을 조기에 종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국경선 지역에서 공세적으로 대응한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주로 육상에서, 일본은 주로 해상에서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므로 지상과 해상 국경선 경계전력을 적극 운용한다. 따라서 국경선 일대에서는 경계부대에 의해 적의 기습공격을 차단하고 후방에 있는 주력부대에 의해 적의 주력을 마비시키는 개념의 국경선 방위전략을 채택한다.

둘째로,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조기에 마비시킨다. 장차전의 양상이 적의 영토를 축차적으로 점령 후 적의 중심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의 전략적·작전적 중심을 원거리에서 동시·병행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적의 군사 중심을 식별하여 강력한 수단을 이용 타격하여 마비시킴으로써 적의 군사능력을 조기에 혼돈상태로 빠지게 한다. 이로써 전쟁 초기에 우선권을 확보하여 전쟁의 승리의 여건을 마련한다.

셋째로, 지역내로 확전 시 공세적 기동전력을 적극 운용한다. 경계지역에서 적을 제압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국토내부로 적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기동성을 구비한 전력을 적극 운용하여 적의 투입전력을 섬멸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휘구조와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이 체계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4. ‘비군사적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처한다.’

현대적 안보개념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위협도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는 이의 필요성을 한층 증가시켜 주었다. 대부분의 위협은 국가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초 국가적 위협이므로 한 국가만의 힘으로 대응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즉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적으로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대비한다.⁶⁰⁾

제 3 절 군사력 건설방향

군사전략은 국가 및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정의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은 양병(養兵)의 개념이고, 운용하는 것은 용병(用兵)의 개념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차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 즉, 양병(養兵)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한정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군사력 건설은 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상통한다. 군사용어사전에서 군 구조(軍構造 : Force Structure)는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 구성관계를 말하며 지휘구조·전력구조·부대구조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휘구조(指揮構造 : Command Structure)는 ‘국방부 및 합참으로부터 전투부대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어진 지휘관계 구조를 말하며, 통상 정책을 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군사력을 건설하는 각 군 본부 이상의 상부구조와 각 군 내부 간 관계를 설정하는 하부구조로 구분’되며, 전력구조(戰力構造: Forse Structure)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고 군사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전력배비개념, 인력규모, 유형별 부대수 및 무기체계 등의 전력을 개략적으로 구상하는 것’을 말하며, 부대구조(部隊構造 : Unit Structure)는 ‘전력구조를 기초로 합동부대, 제병협동부대, 전투부대,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로 구분하여 단위제대별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배분하고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국방개혁 2020(안)에서는 군 구조를 지휘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로 세분하여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병력구조를 포함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병력구조는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을 포함한 병력의 수, 각 군의 병력의 비율,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비율, 상비전력의 축소에 따른 예비전력의 역할

60) 장영호(2008), 전계논문, p.90-92.

1. 지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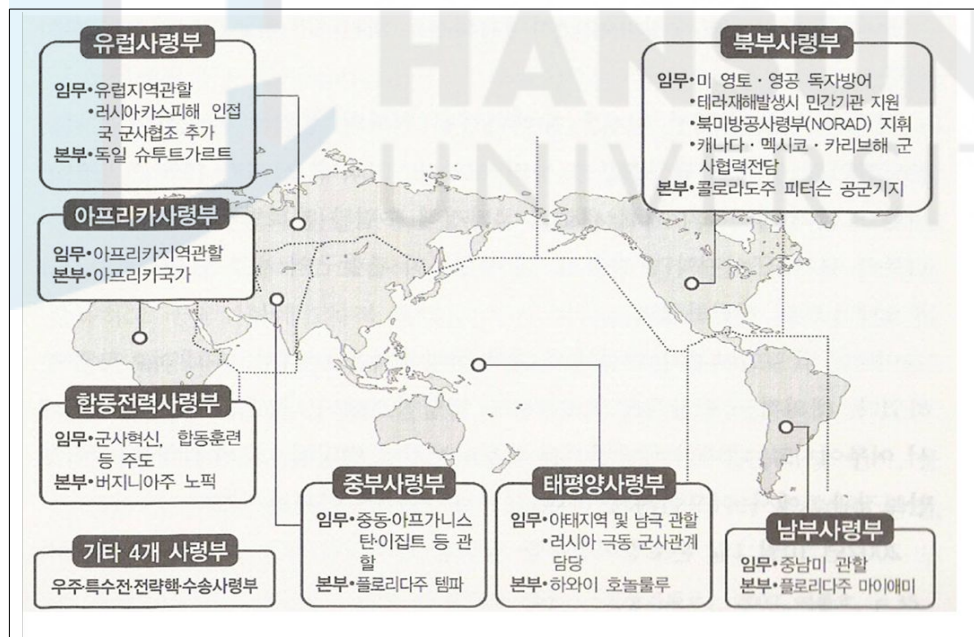
먼저 상부 지휘구조는 합동군제에서 합동군제 요소를 포함한 통합군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미 국방 상부지휘체계 〈그림 3〉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illegible]

– 77 –

리 실정에 맞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흔히 통합군제 하면 모든 군령 및 군정권이 최고 직위의 군인에게 집중되어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기시하나 이는 기본적인 합동군제와 차이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하다. 합동군제는 국방장관이 군정·군령을 통할하여 3군(육군, 해군, 공군)이 각 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존재한다. 행정(養兵, 작전지원)인 군령권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담당하여 시행하고, 작전(用兵, 작전지휘)인 군령권은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참모의장을 경유하여 행사하거나 단일지휘관(통합사령관)에 의해 통합 작전지휘 한다. 따라서 강력한 지휘권 발휘에는 곤란한 단점이 있다. 반면에 통합군제는 국방장관이 군정·군령을 통할하며, 통합군사령관이 전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 3군(육군, 해군, 공군)은 존재하나 각군 본부 및 참모총장이 없고 각 군 고유의 지원기능을 제외한 전군 지원기능은 통합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전·평시 작전지휘 일원화로 군사적 통합운동과 상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군정·군령의 제반기능(권한)배분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의 통합군제가 가능하다. 미 국방조직체계는 <그림 4>을 참고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4> 미국의 지휘체계



* 출처 : 조영갑, 『현대전쟁과 테러』, 서울 : 선영사, 2009, p.312

미국은 영토밖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본토방위를 위한 독립사령부를 두지 않았지만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국방정책 수립과 본토방어를 위한 북부사령부의 설치, 군사전략 발전추진, 각 사령부의 관할구역 재조정 등 세가지 주요 내용으로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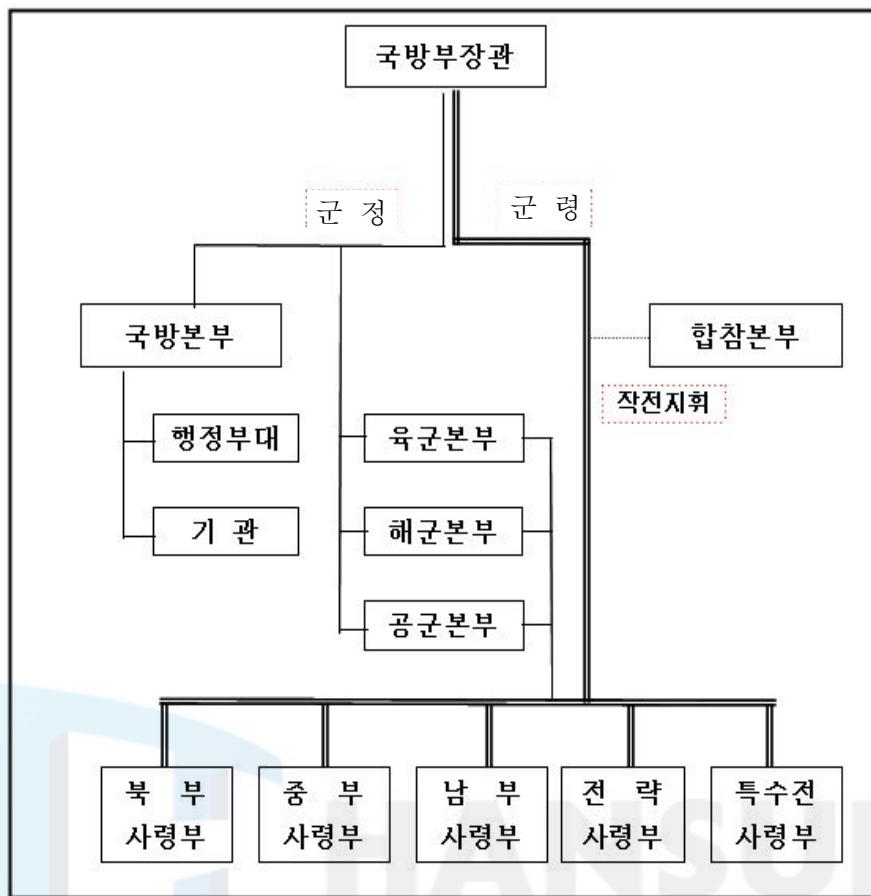
미 국방조직체계 <그림 4>을 참고하여 통일한국군의 국방장관은 군정권을 국방본부 및 각 군 본부를 경유하며,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지역별 통합사령부에 행사하고, 지역별 통합사령부는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형태의 발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구조는 국방장관 예하에 각 군 본부를 두고, 군정 및 군령기능을 국방부장관이 국방본부와 합참본부로 각각 분리하여 운용한다. 국방본부는 작전기능을 제외한 군정기능을 각 군 본부를 통해 지역사령부에 대하여 행사한다. 합참본부는 지역사령부를 작전지휘하며, 각 지역사령부는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세부적인 아이디어로 국방부장관 예하에 각 군 본부 대신에 육군청, 공군청, 해군청을 편성하여 국방부가 각 군청을 통해서 군정을, 합참이 개별 사령부를 맡음으로써 군정과 군령의 분리를 구분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육·해·공군의 통합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⁶¹⁾

다음으로 하부구조는 상부지휘구조에서 통합군제로 채택하였다면 지역 및 임무별로 지·해·공 통합사령부를 편성함으로써 합동성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휘체계로 군정분야는 각 군청으로부터, 군령분야는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즉응성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61) 제정관(1998), “남북한 군사통합방안과 통일국군 건설방향”, pp.185-186.

〈그림 5〉 통일한국군의 지휘구조 발전(안)



2. 전력구조

전력구조(戰力構造:Force Structure)는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고 군사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전력배비 개념, 인력규모, 유형별 부대 수 및 무기체계 등의 전력을 개략적으로 구상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정의하였다. 여기서 배비(配備:Dispose)란 “특정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다중배비, 중심배비, 기동배비, 중점배비로 구분 할 수 있다.⁶²⁾ 남·북한 통일이후의 가용한 인력과 예산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인력규모, 유형별 부대 수의 연구는 제한되어 생략하고, 전력배비 개념과 무기체계 위주로 논하고자 한다.

1) 전력배비 개념

부대구조 측면에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전방위적 방위체제를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완승을 위한 전면전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제한된 목표를 가진 첨단 정예전력 간의 치열한 단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단 시간 내에 첨단 정예전력을 투입하여 적을 압도하고, 적의 본격적인 전력투입 이전에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여, 정치적 협상에 임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⁶³⁾ 따라서 북방에서는 북부사령부를, 남방에서는 남부사령부를, 그리고 중앙에는 중부사령부와 전략사령부, 특수전사령부를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운용함으로써 적시 대응하도록 한다. 세부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부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음에 따라 국경선 지역에서의 지상 및 공중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에 국경경비대를 편성하고, 후방에 신속대응군⁶⁴⁾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북서방위군단,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동방위군단, 그리고 공군 비행단 및 항공전력을 보유토록 한다.

둘째, 남부사령부는 주로 일본의 해상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전력위주로 우선 편성하고, 지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對)상륙작전이 가능한 해안방위대와 신속대응군 및 후방군단 등으로 편성하여 종심방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병행하여 적정 공중 및 항공전력 보유토록 한다.

셋째, 중부사령부는 주로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의 해상위협에 대비하면서, 북방과 남방지역 증원을 위한 전략적 중앙 즉응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해상위협에는 서·동해상 및 대(對)상륙전 위주의 전력으로 편성하고, 증원전력은 공세적인 개념을 적용한 기동부대와 공군 및 항공부대, 상륙부대를 보유토록 한다.

넷째, 전략사령부는 주변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반

62) 『군사용어 사전』, 교육사, p.226.

63) 박선섭 외(2000), 『2020년도 주변국 군사능력 평가』, 서울 : 국방연구원, p.43.

64) 박원중(2001), “통일한국군 군사력 건설 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p.151.

도 중앙지역에 위치하여 전방위로 중심깊은 전략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략공군, 미사일부대, 사이버부대, 우주전부대, 심리전부대 등을 다양하게 편성한다.

주변국가 위협에 대한 억제 및 신속대응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고려 시 방위충분성에 입각한 비대칭적 성격의 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는 국방재원의 한계라는 환경 하에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최적 안이기도 하다. 비대칭적 성격을 구비한 부대로는 장차 전장 환경을 고려 시 전략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부대, 사이버전 부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장차전은 사이버·전자전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사이버전(Cyberspace Warfare)과 전자전(Electronic Warfare)에 대비하여 미국은 공군 예하에 세계 최초로 사이버사령부를 편성하여 2008년 10월 1일부로 정식 출범하였다. 미군사이버사령부 예하에는 4개의 편대로 구성되며, 각 편대는 전자파로 적의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적의 전자파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⁶⁵⁾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통일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예하에도 별도의 사이버전 부대를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전 부대의 경우 민간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구비한 IT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효과적인 작전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유사시 적 지역에 은밀 침투하여 적의 전략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고, 평시에는 대테러 임무 또는 국가차원의 특수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특수전사령부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는 최근의 아프간전 전례, 장차전 양상이 동시·병행전일 것이며, 그리고 운영하는데 적은 국방재원으로도 충분한 전략적·전술적 효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전사령부에는 자체 정보 및 수송능력을 구비하도록 하여 독립작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무기체계

65) 「중앙일보」, 2008. 3. 19.

무기체계(武器體系:Weapon Systems)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 한다.⁶⁶⁾ 또한 무기체계를 구분하면 크게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기타 무기체계”로 분류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국과 지상·해상·공중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비교하였고 개략적인 수준에서 무기체계를 다루기 때문에 국방전력발전업무 규정에서 언급된 무기체계 분류를 준용하여 크게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지상, 해상, 공중, 화력, 방호,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무기체계의 발전방향은 군사전략개념 구현이 가능하면서 장차전 양상에 부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앞에서 군사전략개념을 평시 억제, 유사시 거부적 적극방위전략이라는 개념을 수립하였고, 장차전 양상이 디지털·네트워크전, 정보·사이버전, 전자·로봇전, 정밀타격전, 동시·병렬전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지휘통제 및 통신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⁶⁷⁾ 현재는 합동군제 하에서의 지휘통제 및 통신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군 구조가 통합군제로 전환된다면 이보다 더 통합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체제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차전 양상이 디지털·네트워크전, 사이버·정보·전자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의 발전이 장차전 양상에 부합할 수 있는 기본전력이라 본다. 따라서 지휘통제 및 통신전력의 첨단화가 필수조건임을 고려하여 우선 전력화 되어야 한다.

둘째, 조기경보 분야의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⁶⁸⁾ 조기경보 분야로써 자주적인 정보획득을 위한 조기경보기(AWACS)의 보유는 필수적이다. 현재 조기경보기는 구입과 운용상의 막대한 비용의 소요로 인하여 극소수의 국가 이외는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주변국 중에서 일본은 이미 조기경보기 4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일본보다 낙

66) 국방부(2008),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제13조 ①항.

67) 장영호(2008), 전계논문, p.104.

68) 하정열(2004), 전계서, p.411.

후된 수준이기는 하나 가까운 시일 내에 조기경보기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영토 및 방위선 크기와 방위권을 고려할 때 최소한 현 일본수준의 조기경보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기경보기 운용상의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무인항공 정찰기(UAV)를 개발하여 부족분을 보강해야 한다.

셋째, 우세한 기동은 미래전장에서 주도권 확보의 필수 요소로써 입체고속 기동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⁶⁹⁾ 우선적으로 지상군은 세계적인 추세인 국지·제한전에 해당하는 중·저강도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 무기체계가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타군과 합동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기동성 강화’를 통해 각종 분쟁에 신속 대응하여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발전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기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서 강습헬기부대를 보강하여 병력과 장비 및 탄약 등을 즉각적으로 수송함으로서 임무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넷째, 해역의 해양통제, 원해작전 및 상륙작전 수행이 가능한 해상·상륙전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고성능 잠수함의 보유가 필수적이다. 이는 해상교통로 보호와 영해 침략자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로서 유도무기와 잠수함을 잘 조화한다면 억제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전략적 군사력이라 할 수 있다.

잠수함의 능력은 주변국의 최신형 보다 더 우수한 수중 탐색능력과 수중공격능력 및 피탐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이와 같은 잠수함 능력은 상대적으로 주변국의 국지·제한전이나 무력시위 등에 대하여 항공모함이나 기타 수상함보다 경제적이며, 효과적 억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군은 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전략군과 기타 모든 군종의 활동을 지원 및 보장하고, 적 전략군의 타격을 거부하며, 전략군을 엄호하거나 지원하고, 지·해군을 지원하며 다양한 전장기능의 수행을 통하여 각 군종 활동을 통합하는 촉매역할을 지원한다.⁷⁰⁾

69) 배득식(2001), “육군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동북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 군의 발전방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121.

70) 권명신(1996),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 공군대학, p.47.

공군 무기체계는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과 자주적 작전능력 구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C4I체계의 생존성 증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군전력의 핵심은 전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투기에 의한 제 공권 확보는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최소한 대비해야 할 전투기의 능력은 주변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이후에는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거리 타격능력 구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⁷¹⁾ 한편 주변국(일본 제외)의 경우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전략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유도무기는 주변국의 전략적 중심에 타격이 가능하도록 최근의 미사일 사거리를 상향조정하여 대략 1,000km 이상의 사거리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통일 한국의 상황이 현 남북대치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군비통제차원에서 국제 미사일통제기구(MTCR)와 미국을 설득하여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변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체의 연구개발과 통일이후 북한의 축적된 유도무기 기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한다면 불특정 위협에 대한 억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특수작전 수행이 가능한 방호 및 비정규전 전력을 확보한다. 특히, 화생방 테러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내 테러를 통해 전 세계는 테러라는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화학·생물학무기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생방 테러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 주도하에 각종 민·관·군의 통합적인 체제를 갖추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다양한 백신의 개발 및 비축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부대구조

71) 박영준(2006),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사상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p.56.

부대구조(部隊構造:Unit structure)는 전력구조를 기초로 합동부대, 제병협동부대, 전투부대,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로 구분하여 단위 제대별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배분하고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합동부대(合同部隊:Joint Force)라 함은 동일 국가의 육·해·공군 중에서 2개 군 이상의 군에서 차출된 규모로 구성된 부대이며, 제병협동부대(諸兵協同部隊:Combind Arms Group)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병과로 구성된 결합체이다.

단위제대별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각 부대별 세부적으로 논하기에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위주로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규모의 신속 대응능력을 유지한다. 장차전의 양상은 대규모 전면전 보다는 국지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지전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초전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휘계선 상에 다수의 부대가 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중간계층의 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적 지형을 고려한 부대를 편성·운용한다.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이 거부적 방위전략을 채택하였으므로 주 전장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지형에 부합된 부대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군의 경우 산악지형으로 기동여건이 불비한 북부 및 동부지역은 경보병 부대를, 비교적 기동여건이 양호한 서부 및 남부지역은 여단급을, 그리고 전략적 혹은 작전적 예비로 공정부대 및 공중강습부대의 부대구조를 구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신속한 기동성과 막강한 화력을 겸비한 육군항공부대를 각 제대에 고루 편성 운용함으로써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육군항공을 전략적 수단으로 운용되는 자산의 경우 중앙집권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타의 경우 군단급에서 항공여단 규모로, 사단급에서 항공대대 규모로 편성하여 기동성 및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해군의 경우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면서 특히 잠수함전단은 주로 동해와 남해지역에서 운용함이 효과적일 것이며, 해병대의 경우 신속 대응 및 공·지 기동이 가능한 구조로 서·남해 지역에서 운

용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다. 공군의 경우 전방위로출격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전략공군을 유지하고, 각 사령부 예하에는 별도로 비행단을 편성하여 즉응성 있게 운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 부대를 경량화 한다. 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유연성 있는 부대구조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 중한 사단급 보다는 여단급이 타당하다.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장이 광역화 되었고, 이에 따라 제대별 작전지역이 확장되었다는 것도 사단급 보다는 여단급으로의 전투제대 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는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장상황인식능력이 향상되었고, 장거리 정밀타격 및 전장상황인식 능력을 보유하였다는 의미이다. 특히 통신능력 및 무기체계의 발달로 소부대가 과거 사단급에 해당하는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제2차세계대전시 사단급의 능력을 현재는 대대급이 담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해준다.

넷째, 비대칭을 달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부합된 무기 및 장비를 운용한다.⁷²⁾ 장차전의 양상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초로 질적 우위의 군사력이 승리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제대별로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를 보유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연계 신규무기체계 전력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지·해·공 전력이 실시간 통합 운용되도록 한다. 과거 전쟁은 각 군이 별도로 작전을 수행하였으나 현대 및 장차전은 합동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부대구조 발전이 요구된다.

여섯째, 병과·기능별 균형된 발전으로 제병협동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대 및 장차전은 일부 소수병과 위주로 전쟁수행을 지양하고 제병과가 통합하여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수행되므로 각 병과와 기능이 균형 발전되도록 부대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5. 병력구조

72) 하정열(2004), 전계서, p.408.

상비 및 예비병력의 운용에 대한 방안이다. 최근의 전쟁 양상과 장차전 양상을 고려해 볼 때 다수의 병력에 의한 상대적 우월성에 의한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병력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첫째, 최 정예 소수위주의 상비병력을 유지한다. 다수의 병력에 의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즉, 최근 이라크·코소보전의 전쟁양상을 보더라도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질적 우세에 의해서 승리를 달성하였다. 또한 다수의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방재원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병력운용에 투자하는 국방재원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과학화된 무기체계 개발에 상대적으로 국방재원은 많이 투자하여 장차전에 부합된 디지털 군을 양성하도록 하며, 이에 적용 가능한 소수 정예위주의 상비병력으로 편성하여 전력발휘의 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예비병력의 증은 매우 두텁게 한다. 위협의 대상이 대륙세력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해양세력인 일본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병력의 증을 다원화하여 유사시 단계적으로 동원하도록 하여 국가총력방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방위군의 경우 임무는 지역방위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현재 미국의 주 방위군을 평시 주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통합방위제도와 연계 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효율적인 평시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 고려 시대에 북방 이민족(異民族)침입에 대비 북방(北方)양계(兩界)에 상비군인 주진군(州鎭軍)을 운용하였고, 각 지방에는 상시 동원 가능한 농민예비군인 광군(光軍)을 포함한 주현군(州縣軍)을 편성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평안도와 함길도에 상비군 중심의 군익도(軍翼道)를 설치하였고, 각 지방에는 상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된 진관체제(鎭管體制) 및 제승방략(制勝方略)을 운용하였던 개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용개념을 근간으로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고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작전소집’의 권한을 보유하여 비상사태의 선포 없이 90일의 범위에서 선발예비군 2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⁷³⁾을 참고하여 부분 동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동원의 융통성

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제까지의 남·북한 통일 이후의 안보상황 예측을 기초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통일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군사전략을 종합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남·북한 통일이후 통일한국군 군사전략(종합)

군사적 위협국		일 본	중 국	러 시 아
군사능력		경제력+첨단과학화 추진	- 양적규모 우세 - 현대화 지속추진	강력한 해·공군 전력 보유
통일이후 안보위협		- 독도 영토분쟁 - 에너지 자원 분쟁 - 전면전으로 확대	- 만주영토 분쟁 - 백두산 경계분쟁 - 에너지자원 분쟁 - 전면전으로 확대	- 간도 영토분쟁 - 녹둔도 영토분쟁 - 에너지자원 분쟁 - 전면전으로 확대
장차전 양상		디지털, 네트워크전, 정보·사이버전, 전자·로봇전, 장사정·정밀타격전, 동시 병행전		
통일한국군 군사전략 목표		평 시	분 쟁 시	전면전시
		충분한 방위력을 가지고 억제/예방	강력한 응징보복, 도발 격퇴, 원상회복	공세적인 방위로 승리
통일한국군 군사전략 개념		- 자주적 군사력 보유 - 군사외교활동 강화 - 저항의지 유지	- 신속대응 - 중앙응응군 운용 - 응징보복	- 국경선 방위 - 적 핵심군사시설 마비 - 공세적 기동전력 운용
군사력 건설 방향	지휘 구조	통합군체 (군정 : 국방장관 → 육·해·공군청 → 통합사령부, (군령 : 국방장관 → 합참본부 → 지역별 통합사령부)		
	전력 구조	- 전력배비 : 지역별 통합사령부 운용 (북부, 중부, 남부, 전략 및 특수전 사령부) - 무기체계 - 통합전투력 발휘 가능한 지휘통제, 통신전력 확보 - 조기경보, 전장감시 능력 확보 - 공세기동, 원해 / 상륙작전 수행, 공중우세 / 통제 전력 확보 - 중, 장거리 유도부기, 비정규전 전력 확보		
	부대 구조	- 중간계층 단축 - 첨단과학무기 / 장비 보유 - 병과 / 기능별 균형 발전된 제병협동 부대 - 지형고려 부대유형 다원화 - 지·해·공 전력 실시간 통합 운용		
	병력 구조	- 최정예, 소수위주의 상비병력 유지 - 예비병력 다원화		

73) 「국방일보」, 2007. 4. 2.

제 5 장 결 론

탈냉전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6일 대포동 2호(광명성 2호)발사라는 또 한번의 모험을 감행하는 등 끝나지 않은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 국제정세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시 한반도의 숙원인 ·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길 바라지만 우리가 원하는 남·북한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고 단정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한국의 통일은 한민족이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될 것이다. 통일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향후 2025년 전후에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준비로 큰 혼란없이 평화적인 남북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정책 및 국방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통일이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 후에 야기될 과제들을 예상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목표도 없이 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의 군사전략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군사력은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명백히 한국의 주된 위협은 북한이지만, 통일한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의 주도적인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의 주변국을 고려한 군사전략을 미리 구상해야만 한다. 왜냐면 통일이후에는 군사적으로 관심 대상은 북한이 아닌 주변국가들이고, 군사력 건설은 10~15년 이상의 선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한 통일이 되기 전에 주변국가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을 미리 구상하고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남·북한 통일이후의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안보환경은 각 국가 간에 전략적 연대와 견제를 병행하면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조하면서, 대규모 전쟁은 축소되는 반면에 국지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동북아 안보환경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중국의 국력과 군사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역내 영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동북아 지역은 상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주변국가의 군사전략 및 변화전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안보정세는 일부 낙관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동북아의 경제대국 일본이 점차 정치·군사대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과, 군사대국 중국이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더욱 강력한 현대식 군사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그럼으로써 미국과 잠재적인 갈등관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예상들로 인해 지금 보다도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이 동북아 역내 안정자 역할을 지속 수행하는 가운데, 한국이 일·중·러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외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는 주변국과의 잠재된 갈등요인이 표면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에 주변국가와의 군사적 충돌을 가정하여 군사력을 상호 비교해 보면 주변국가인 일·중·러의 군사력은 매우 막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남·북한 통일군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주변국가의 흐름 속에서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 단일국가로 위치하게 된다면 동북아 지역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형성될 것이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선 지역에서 영토분쟁, 또는 에너지 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통일 이후의 안보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대응 군사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선행조건으로서 장차전의 양상을 살펴보면 장차전은 디지털·네트워크전, 정보전, 사이버전, 전자·로봇전, 장사정·정밀타격전, 동시·병행전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은 상황분석을 기초로 현 우리의 한국 군사전략을 살펴보면 주로 북한위주의 위협에 초점을 두고 대응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주변국가와의 위협은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남·북한 통일이후의 대응전략을 구체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군사전략목표는 평시 주변국가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여 예방하고, 분쟁 또는 전면전 시에는 적을 격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개념은 평시에는 자주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분쟁 시에는 신속대응하여 기선을 제압하되 필요시 응징보복을 하여 원상회복토록 하며, 만약 전면전으로 확전 시에는 가용한 군사력을 이용 적을 격퇴하여 승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논의된 군사전략목표와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군사력이 요구되는데 세부 군사력 건설방향은 지휘구조로부터 전력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순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휘구조는 현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합동군제가 적절할 것이나, 남·북한 통일 이후에는 다수의 주변국가의 위협에 각각 대응해야 하므로 지역별 통합사령부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군제가 바람직한 지휘구조로 판단된다.

둘째, 전력구조는 지역별로 북부·중부·남부사령부를 배치하며, 중앙에는 전략 및 특수전 사령부를 각각 배치시켜 한반도 전 방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비하고, 무기체계는 장차전 양상에 부합되도록 첨단과학기술에 바탕한 상대 우위의 무기를 확보토록 한다.

셋째, 부대구조는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중간계층을 단축하고, 병과 및 기능별 균형 발전된 제병협동부대로 편성한다.

넷째, 병력구조는 최정예·소수 위주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고, 아울러 국가총력방위가 가능하도록 예비병력 층을 다원화하여 대비한다.

이러한 군사전략을 바탕으로 군사력 건설소요를 도출하여 국방부에 소요

제기하고, 가용한 국방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연도별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은 다음 단계이다.

우리는 통일 후의 군사력을 구축함에 있어 우리가 인력, 기술, 재정 등 대부분의 능력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비교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상의 제한은 포괄적인 우위의 관점보다는 비대칭성이나 국지적 우위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한국이 의미하는 것은 한민족 발전의 기회임과 동시에 많은 도전과 시련이 예상된다. 저자의 짧은 식견으로 광범위하고 예측하기 제한되는 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한반도 통일을 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을 매우 세밀하게 연구하여 준비하여야만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비록 본 논문은 연구기간이 제한되고 부족한 식견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살필 수는 없었다. 따라서 군사전략 개념구현과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노력과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 행 본

국방대학원(1993),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 안보문제 연구소.

_____ (2004), 『2003~2004세계안보정세종합분석』, 안보문제연구소.

_____ (1984), 『군사전략(I)』, 서울 : 국대원

국방부(2008), 『2008국방백서』, 국방부.

_____ (2006), 『한국고대 군사전략』,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06), 『고려시대 군사전략』,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06), 『조선시대 군사전략』,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06), 『국방기획관리 기본규정』, 국방부.

_____ (2008),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국방부.

국방정보본부(2006), 『2005-2006세계군사동향』, 국방정보본부.

_____ (2006), 『2005-2006세계의 군사력』, 국방정보본부.

_____ (2007), 『2007년 일본 방위백서』, 국방정보본부.

_____ (2007), 『2006년 중국 국방백서』, 국방정보본부.

_____ (2008), 『2007년 중국 국방백서』, 국방정보본부.

_____ (2008), 『러시아 군사총람』, 국방정보본부.

_____ (2003), 『2002 세계군사동향』, 서울 : 국방정보본부

김충영(2000), 『통합안보전략과 국방과학·정보』, 두남출판사.

노병천(1992), 『도해손자병법』, 가나문화사.

미국 국가정보위원회(2009), 『글로벌 트렌드 2025』, 서울: 한울.

박상봉(1999), 『독일통일,통일한국』, 진리와 자유.

박원재(2003), “자위대 폐지 국방군신설”. 『동아일보』.

박휘락(2005), 『전쟁,전략,군사업문』, 법문사.

배정호·김국신·신상진·여인곤(2006), 『동북아 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통일연구원.

오보영(1999), 『통일독일,통일군대』 군사연구총서 제29집,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이재형(2007), 『중국의 해양전략』, 황금알.
- 이종학(1995), 『전쟁론』, 일조각.
- 외교안보연구원(2009), 『2009 국제정세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육군대학(2004), 『세계전쟁사 下』, 육군대학.
- _____ (2008), 『군사전략』, 육군대학.
- 육군본부(2000), 『한국의 군사전략』, 육군본부.
- _____ (2006), 『군사용어사전(야전교범 3-0-1)』, 육군본부.
- _____ (2007), 『지상전개념서』, 육군본부.
- 윤정원(2002), 『국가안보론』, 박영사.
- 장 용(2005), 『군사전략 이론 및 적용』, 대전 : CODI출판부.
- 조셉 나이(2004), 『국제분쟁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 조명(1996), 『한국의 운명』. 서울 : 교학사.
- 조영갑(2009), 『국가위기 관리론』, 서울: 선학사.
- _____ (2009), 『현대전쟁과 테러』, 서울: 선학사.
- _____ (2009),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서울: 선학사.
- _____ (2009), 『심리전·민군작전과 리더십』, 서울: 선학사.
- _____ (2006), 『국가안보학』, 서울 : 선학사.
- _____ (2005),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서울: 국방대학교.
- 전경만(2005), “동북아 중장기안보구도의 분석적 전망”, 서울 : KIDA
- 최병갑 외(1988), 『현대군사전략 대강(I)』, 서울 : 을지서적
- 하정열(2004), 『한반도의 평화통일 전략』, 서울 : 박영사
- 한국국방연구원(2006), 『2005~2006동북아 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 _____ (2006), 『국방정책연구 제72호』, 한국국방연구원.
- _____ (2008), 『2007~2008동북아 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2), 『전략연구』 통권 제26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_____ (2004), 『전략연구』 통권 제3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_____ (2005), 『2005동북아 전략균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_____ (2006), 『2006동북아 전략균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_____ (2007), 『전략연구』 통권 제39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01), 『동북아시아 전략환경변화와 우리 군의 발전방향』, 이벤프라인.
- 합동참모대학(2008), 『국방조직』, 합동참모대학.

합동참모본부(2003), 『합동기획』, 합동참모본부.

_____ (2004), 『합동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나. 연구논문

권영신(1996),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발전 방향』, 공군대학.

김문수(2001), 『한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김정익(2005), “미래 기계화부대 지휘구조 발전을 위한 제언”, 「주간 국방논단」, 제1061호. 한국국방연구원.

김재철(2002), “패권, 다극화, 그리고 중·미 관계 : 세계질서를 둘러싼 경쟁?”, 『국제정치 논쟁』

문장렬(2000), “한국주도의 한국방위의 조건들” 『교수논총』 제18집, 국방대학교.

박기련(2004), “9.11테러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국방부.

박영준(2006),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사상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박선섭 외(2000), 『2020년도 주변국 군사능력 평가』, 서울 : 국방연구원

배득식(2001), “육군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동북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 군의 발전방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송효진(2006), 『중국의 미래 해양 분쟁요인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군대학.

심경욱(2000), “주변국의 군사혁신 비전과 전략, 그리고 잠재력 판단.” 『전략연구』 제7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이종규(2002), 『통일 한국의 군사력 건설방향』, 육군교육사령부.

장병욱(1996), “통일한국의 군사동원체제 발전방향”, 『국방동원의 과제와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장영호(2008),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규필 외(2003), “미래지상전 교리 발전 방안”, 『2003년 육군전투발전』, kris,

2. 국외문헌

Antony, H. Cordesman.(2003), Instant, Lesson softhe Iraq War, CSI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2005), The Military
Balance 2005~2006, IISS.

Jane's, 18. June.(2003), Jane's Defense Weekly, Jane's Publication.

Richard, P.Hallion.(1992),Storm OverIraq : Air Powerand the Gulf
War, Smithsonian Institute Press.

US Department of Defense.(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US Department of Defense.



ABSTRACT

Embodiment of Unified Korea's Military Strategy Following the Transformation of Surrounding National Security Circumstances

Park, Jang Woo

Major in Defense Policy

Dept. of Int'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at the unified Korea is the decisive element to map out the military strategic plan that would balance and control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four biggest powers in Northeast Asia. After the Cold War, a new security environment has been built up on the Korean Peninsula. Once the unification is achieved, the Republic of Korea will have to face a new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al issue with its surrounding countries and thus a new generation of military strategic plan will be required as the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is growing.

For the last few decades, China has been distorting the Korean history by brainwashing Doreans descendants who are living in China without any knowledge about their cultures or tradition, and bringing on an issue about Dok Do Island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side, stubborn Japanese government is still claiming possession of the Dok Do Island and often bringing on distorted Korean history. Furthermore, once unified with North Korea, Russia will come into contact with various types of national issues as well. Therefore, this research maps

out the environmental issues surrounding three countries and America, without the assumption that U.S.A will always be Korea's compan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ers will take different ways to set up and establish role model of military strategic plan by writing books, issuing magazines or producing essays. Starting from there, they will pick the most adequate and relative information to choose the best scientific method to approach. There are numerous opinions about when the unification occurs, but this particular research assumes it will be after 2025 and it will be led gradually by R.O.K. The military strategic plan is dependent on the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composing factors. If one of them cannot support and work well then it will remain as incomplete task. Therefore, being unified has to provide meanings that Korean Peninsula doesn't undergo and repeat its national stagnation under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as they had in the past and will carry a responsibility to balance and control with their sovereignty and identity.

This research may only concern with theory about the military strategic plan but virtually it takes eastern, western and surrounding powers' periodical changes on military strategic plan to set up and investigate on their own. Finally, more researches are required on the effective factors that are important on the military strategic plan such as nationalism, military tradition, political issues, social system, threats from enemy, mutual relationship with surrounding powers and so on.